아시아의 빈곤과 불평등

반빈곤운동의 오늘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

2026.10.16(금) 9:30 - 18:3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A→PAP!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아시아의 빈곤과 불평등

반빈곤운동의 오늘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

2026.10.16(금) 9:30 - 18:30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A→PAP!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A→PAP!*

아시아빈민대회
공식홈페이지

후원으로 힘보내기 |
국민은행 763601-04-167058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2026 아시아빈민대회 개신교참가단(고난함께, 기독교도시연구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독여민회, 사이교회, 새민족교회, 생명샘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옥바라지선교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백교회, 향린교회, 희년향린교회)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행동하는간호사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관악주민연대 | 광진주민연대 | 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 | 기초생활수급당사자 모임 '모힘' | 난민인권센터 | 내가만드는복지국가 | 너머서울 | 노년유니온 | 노동당 | 노들장애인야학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녹색당 | 돈의동주민회 | 동자동사랑방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민달팽이유니온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민주노총 서울본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반빈곤네트워크(대구)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부산반빈곤센터 | 빈곤사회연대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 사회진보연대 | 서울민중행동 | 서울복지시민연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 서울탈시설장애인당 |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 시민건강연구소 | 아시아모니터리소스센터 | 양동주민회 | 옥바라지선교센터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인권운동사랑방 | 장애여성공감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해방열사_단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빈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정의당 |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주거연합(사) |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진보당 | 참여연대 | 천주교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 | 천주교예수회인권연대연구센터 | 천주교예수회홈리스사도직 | 천주교인권위원회 |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 평화주민사랑방 | 플랫폼c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도시연구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한국주민운동교육원 | 한국주민운동연대 |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 해외주민운동연대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향린교회 | 홈리스행동 (총 88개 단체)

<아시아의 빈곤과 불평등- 반빈곤운동의 오늘>

컨퍼런스 시간표

세션1. 「아시아의 사회보장 현실과 나아갈 길」		
10:00 ~ 12:00	좌장: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1	일본의 빈곤 현황과 공적부조의 문제점 - 기타시마 쇼고 (생명의 보루 소송 변호사, 사회복지사)
	발표2	격차 좁히기: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 현황 - 앤디 (유피에이 주민조직가)
	발표3	홍콩의 빈곤 현실과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 응와이퉁 (소코 주민조직가)
	발표4	상처 입은 섬과 낙인을 짊어진 사람들 : 대만의 빈곤 경험 당사자들이 겪는 낙인, 행동, 그리고 사회변화 - 아용 추 (인생백미 활동가)
	발표5	발굴되는 빈곤과 증명해야 하는 권리 : 한국의 불평등과 제도의 배제 - 김산하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12:00 ~ 13:00	점심 시간	
세션2. 「생명의 보루 소송으로 본 공공부조의 역할과 책임」		
13:00 ~ 14:50	좌장: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1	생명의 보루 소송 투쟁의 경과, 원고 · 당사자의 조직화, 그리고 남은 과제 - 타가와 히데노부 (생명의 보루 소송 지원자,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사무국 차장)
	발표2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소감 - 모리 키누코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토론1	생명의 보루 소송, 한국에서의 의의 -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토론2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폐지 투쟁의 결과와 이행 상황 -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14:50 ~ 15:05	쉬는 시간	
세션3. 「아시아 현장의 목소리: 투쟁은 나의 힘」		
15:05 ~ 17:30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패널	안젤리나 선 (소코 홈리스 경험 당사자) 아이비 (씨오엠 주민조직가) 오중찰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박종만 (양동주민회 위원장) 조상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김나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외협력실장) 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
17:30 ~ 18:30	폐막식	

평등 약속

2026 아시아빈민대회는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지향합니다.

✱ 나이, 성별, 성적지향과 정체성, 가족 형태, 장애, 병력, 신체 조건, 출신 지역, 학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황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며 평등한 관계를 위해 노력합니다.

! 개방적인 태도로 서로를 환영하고, 각자의 경험과 현재를 존중합니다. 모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노력합니다.

⚑ 2026 아시아 빈민대회 참여자는 평등약속을 존중하고 실천합니다. 꾸준히 새로운 평등의 조건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 **약속 실천을 위해 함께 생각할 것**

: 자연스럽다거나 편리하다는 이유로 성별화된 방식의 역할 분담을 하지 않나요?

: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나요? 타인의 생각에 대해 쉽게 단정짓지는 않나요?

: 시스젠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적인 연애 및 가족, 결혼, 출산, 양육을 당연한 듯 요구하거나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 **편안한 문제제기, 함께하는 문제해결**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 즉시 문제제기를 받은 당사자는 행동을 중단합니다.

: 불편 제기는 분위기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불편한 상황, 잘못된 행동을 마주했을 때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구성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 경험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받았을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과합시다.

: 빈민대회 기간 중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은 사건 해결의 일반 원칙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아시아빈민대회米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5 컨퍼런스 시간표

6 평등약속

7 차례

9 여는 글

11 인사말

23 **세션1 <아시아의 사회보장 현실과 나아갈 길>**

25 [발표1] 일본의 빈곤 현황과 공적부조의 문제점 | 기타시마 쇼고

33 [발표2] 격차 좁히기: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 현황 | 앤디

41 [발표3] 홍콩의 빈곤 현실과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 응와이퉁

57 [발표4] 상처 입은 섬과 낙인을 짊어진 사람들 : 대만의 빈곤 경험 당사자들이 겪는 낙인, 행동, 그리고 사회변화 | 아용 추

65 [발표5] 발굴되는 빈곤과 증명해야 하는 권리 : 한국의 불평등과 제도의 배제 | 김산하

75 **세션2 <생명의 보루 소송으로 본 공공부조의 역할과 책임>**

77 [발표1] 생명의 보루 소송 투쟁의 경과, 원고·당사자의 조직화, 그리고 남은 과제 | 타가와 히데노부

93 [발표2]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소감 | 모리 키누코

101 [토론1] 생명의 보루 소송, 한국에서의 의의 | 남찬섭

107 [토론2]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폐지 투쟁의 결과와 이행 상황 | 이형숙

113 **세션3 <아시아 현장의 목소리 - 투쟁은 나의 힘>**

115 [패널1] 안젤리나 선

121 [패널2] 아이비

129 [패널3] 오중찰

135 [패널4] 박종만

141 [패널5] 조상지
151 [패널6] 김나영
157 [패널7] 주장욱
167 **부록 2026 아시아 빈민대회 초청 단체 소개**

여는 글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평등과 평화를 위한 아시아 빈민들의 연대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는(10월 16일)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 우리는 「2026 아시아 빈민대회」를 개최합니다. 대만·일본·필리핀·한국·홍콩의 빈곤 당사자와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각국의 빈곤과 불평등의 현실을 공유하고, 빈곤 없는 세계를 향한 공동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칠 하나의 구호는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해졌지만, 동시에 그 부의 창출로 인한 풍요와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개인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조만장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부가 한 나라의 경제 규모를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자산 증식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조만장자는 독점적 부의 집중과 불평등 심화를 강화하는 현 체제의 얼굴입니다. ‘2026 세계불평등보고서’에 따르면,상위 0.001%의 억 만장자가 전 세계 하위 50%, 인류 절반이 가진 자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세 배나 많은 자산을 쥐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만들어졌으며, 지켜지고 있는 체제의 질서입니다.

오늘날 불평등은 단순히 격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등은 기후위기와 일상화된 재난, 전쟁과 경제위기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불평등은 여러 위기를 낳고, 그 위기는 다시 불평등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만들어낸 책임은 불평등하고, 그 피해와 비용 역시 불평등하게 나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위기를 맞습니다.

정부나 국제기구들도 불평등이 이 세계의 문제라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는 처방은 무엇입니까? 공공 지출 등 사회보장을 축소하고,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편, AI 같은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낡은 신자유주의의 해법을 되풀이하면서 불평등을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불을 끄겠다며 기름을 붓고 있는 격입니다.

아시아 빈민들은 이 처방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몸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IMF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공지출 축소와 토지·주택에 대한 금융화, 공기업 민영화 등을 강제했습니다. 금융의 지배는 더욱 공고해졌고, 빈곤은 깊어졌습니다. 그 위기의 비용은 부채를 쌓아 올리며 과실을 챙긴 기업과 은행이 아니라 거리로 쫓겨난 노동자와 철거민, 노점상과 농민들이 치렀습니다.

이 시기 굳어진 아시아의 복지체제는 또 어떻습니까. 생산주의 복지라는 이름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사회보장은 시민의 독립적 권리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종속된 수단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체제를 유지할 만큼의 복지제도를 설계하며 최소한의 지출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아시아의 빈민운동은 위기를 가난한 민중들에 전가하는 이 체제의 구조 맞선 싸움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주거와 의료와 돌봄이 시장화 되고,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비용으로 취급되는 사회에 맞서 가난한 우리의 권리를 외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로 나서는 것이, 우리가 붙들어 온 아시아 빈민운동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구조의 중심에서 맞서 싸워 온 아시아 빈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라는 구호는 우리의 선언입니다. 위기의 책임과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이 불평등한 질서에 맞서겠다는 선언, 평등과 연대의 새로운 질서를 가난한 우리들의 연대로 만들겠다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고 우리의 삶을 짓밟는 불평등한 세계를 바꾸기 위한 우리의 선언과 연대를, 아시아빈민대회를 통해 힘차게 열어갑시다. ⚑

2026. 10. 16

아시아빈민대회 조직위원회

인사말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공동의장
-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스님
- 옥바라지선교센터 황푸하 목사
- 동자동사랑방 차재설 대표
-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한선혜 상임대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영찬 공동의장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공동의장 최영찬입니다.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 아시아의 빈민들이 국경을 넘어 한자리에 모이는 2026 아시아빈민대회 개최를 뜨겁게 환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부는 소수에게 쌓이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람도 노동자와 빈민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거리에서 장사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노점상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노점상들은 도시정비와 질서라는 이름 아래 강제철거와 단속, 과태료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노점상을 범죄자 취급하며 생존의 문제를 단속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의 해체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빈민대회 공동대표로 함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노점상과 철거민, 홈리스,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도시빈민이 처한 현실은 서로 다르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거리와 삶의 터전에서 밀어내는 구조는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도 국경을 넘어 만나야 합니다. 서로의 투쟁을 배우고, 서로의 손을 잡고, 각자의 싸움을 더 큰 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가장 강한 힘은 결국 당사자들의 조직된 힘과 연대라고 믿습니다.

이번 아시아빈민대회가 아시아 곳곳의 투쟁을 하나로 잇고, 쫓겨나지 않을 권리, 장사할 권리,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함께 외치는 더 큰 연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도 그 길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철거민연합 남경남 의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아시아 빈민대회 공동대표, 전국 철거민연합 의장 남경남입니다.

아시아 빈민대회 개최와 그 준비를 위해 애쓰시는 실무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시아 빈민대회의 컨퍼런스 주제는 다양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본주의의 경쟁의 모순과 그에 따른 불의는 필연적으로 빈민계층을 생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약소국에 대한 식민지 착취시대는 지났습니다. 미 제국주의 자본주의 시장이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서 이젠 소위 동맹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들의 경쟁력과 일자리를 뺏기 위해 주저함이 없이 가히 노골적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 또한 분명하다 보니 경제착취를 위한 침략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모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뛰어오르고, 그로 인해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이는 소비 축소로 이어지고, 결국 생산이 줄어 일자리가 축소되고 구조조정의 긴축정책을 사용하고, 빈민정책이 후퇴되고 그에 따라 빈민계층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물가 핑계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비싼 이자와 원금을 갚지 못해 개인 파산이 줄을 잇고 빈민이 확대되는 악순환은 끊임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일입니다.

착취와 수탈, 차별과 불평등의 원흉, 기후위기를 제공하고 기후정의를 외면하는 자본주의의 불의에 맞서 싸워야 우리도 살 수 있는 세상을 쟁취하지 않겠습니까?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는 우리 투쟁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길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시아 빈민대회에 참석하는 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등 각국 활동가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권달주입니다.

2026 아시아빈민대회를 개최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오랜 세월동안 한국의 빈민운동과 함께 궤를 같이하며 행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고,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자립하며 살아갈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 삶은 빈곤과 연결되었고, 부양의무제라는 희대의 악법으로 인해 제대로 된 기초생활보장도 받지 못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2년 8월 21일부터 2017년 9월 5일까지 서울 광화문역 지하에 농성장을 차리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투쟁을 함께 해 나갔습니다. 그 투쟁의 결과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의 장애인운동과 빈민운동은 행동해야 할 길이 기나깁니다.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해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아시아빈민대회에서 오는 다양한 나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과 함께 세계 어느 곳으로 가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함께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저 또한 아시아빈민대회의 공동대표로서 한국 장애인운동이 차별에 저항해 왔던 이야기를 세계 각국의 활동가들과 “아시아 빈민대회 컨퍼런스”, “1017 빈곤철폐 퍼레이드” 등 아시아빈민대회 일정 곳곳에서 다양하게 소통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함께 투쟁합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

아시아 빈민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아시아의 빈민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빈민대회를 개최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다중의 위기가 다가오는 위기의 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AI산업 전환과 기후위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그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노동자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써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길을 같이 찾고자 민주노총도 함께 아시아 빈민대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고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사회 가장 큰 문제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가난한 이들과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불평등에 맞서 함께 싸워 나갑시다.

아울러 아시아 빈민대회를 통해서 여러 국가의 활동경험을 공유합시다.

국제적으로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고 있는 만행에 맞서 함께 싸우고 연대하는 것, 그것이 다중의 위기의 시대에 맞서는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의 활동일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천주교 빈민사목위원회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영화 '기생충'(2019)이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흥행을 한 것은 그의 영화 전반에 흐르는 주거와 빈부차에 대한 블랙코미디가 비단 한국만의 현실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 시상식에서 "1인치 정도 되는 자막의 장벽을 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놀라운 영화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 말했듯,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넘으면 훨씬 더 많은 이들과 공감하게 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각자의 현장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아시아빈민대회를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연대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스님

안녕하십니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 스님입니다.

아시아빈민대회 서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시는 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의 활동가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부처님 가르침인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여 우리 사회 가장 어두운 곳에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작은 희망이라도 함께 만들어가는 길에 동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회적 참사,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노동위원회는 이런 활동기조에 입각하여 사회적 빈곤으로 숨져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투쟁하는 이들과 함께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지구촌의 빈곤은 하나의 국가를 넘어선 세계인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 원인도, 결과도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AI시대는 더욱더 부의 양극화, 자원분배의 양극화로 인해 빈곤의 극대화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빈민대회는 기후위기, 불평등을 연대와 협력으로 함께 손잡고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각국의 문제를 넘어 지구촌 전체의 불평등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아시아 빈민대회를 통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전세계 반빈곤 연대투쟁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 〈자애경〉에 '모든 존재는 폭력을 두려워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합니다. 아시아 빈민대회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은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등불같은 존재입니다. 그 노고와 활동에 감사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옥바라지선교센터 황푸하 목사

반갑습니다. 옥바라지선교센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푸하 목사입니다. 마침내 시혜와 동정을 넘어 빈곤철폐 세상의 주체로 함께 설 아시아의 동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반빈곤운동의 기치를 각자의 도시에서 함께 지켜왔으니 이 만남이 뜻깊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서울에서 열리게 된 제1회 아시아빈민대회 주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 전쟁과 폭력, 그리고 심화되는 차별과 혐오 속에서 낙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도 작금의 세계를 거부하며 새로운 세계를 상상하는 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든 쫓겨나도 되는 이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갈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상상력, 그것이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옥바라지선교센터를 비롯하여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개신교인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상력과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실무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차게 행진합시다!



동자동사랑방 차재설 대표

안녕하십니까. 동자동사랑방 대표 차재설입니다. 2026 아시아빈민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대만과 일본, 필리핀, 홍콩을 비롯해 아시아 곳곳에서 오신 이웃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동자동에서 우리가 함께 풀어야 했던 가장 절실한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빠듯해 저축하기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습니다. 마을은행이 생겨 주민들의 저축을 돕기 시작했고, 주민들은 십시일반으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왔습니다.

아픈 이웃이 있으면 함께 병원에 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믿지 못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돕고 도움받는 시간이 쌓이면서, 이제는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동네의 이런 모습이 참 소중합니다.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누구나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우리도 서로의 삶을 나아지게 할 힘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일은 그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자동사랑방은 이 경험을 나누고 여러분에게 배우고자 이번 대회에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어려움을 함께 풀기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듣고 싶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귀하게 듣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이웃과 나눌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동자동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이웃이 되었듯이, 아시아 곳곳의 우리도 멀리서 서로를 믿고 힘을 보태는 이웃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그렇게 우리가 뜻하는 것을 함께 이루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아시아빈민대회를 위해 대만, 일본, 필리핀, 홍콩, 한국 등 아시아 곳곳에서 참여하신 빈민 당사자와 활동가들을 환영하며,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89년 6월에도 '아시아 도시빈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대회에서는 '삶의 자리: 아시아 민중들의 대화'를 주제로 주거와 일터, 생계수단이 가난한 이들의 '삶의 자리'로서 갖는 의미를 토론하고, 각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자리 박탈에 맞서 어떻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경험과 전략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국도시연구소의 전신인 도시빈민연구소가 당시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실을 맡았다는 기록을 보며, 이번 아시아빈민대회에 함께하는 감회가 남다릅니다.

37년이 지났지만, 아시아 빈민들의 삶의 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불평등합니다. 높은 주거비와 강제철거, 취약거처 문제로 겪는 주거권의 박탈은 일터에서 겪는 생존권 위협과 맞물려 가난한 이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는 오늘날, 다시금 아시아 빈민들이 서울에 모여 대화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기대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아시아빈민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빈곤과 불평등한 세상에 맞선 가난한 우리들의 연대를, 아시아빈민대회를 통해 더 넓고 단단하게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한선혜 상임대표

아시아 곳곳에서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삶의 현장을 지켜오신 빈민 당사자와 활동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상임대표 한선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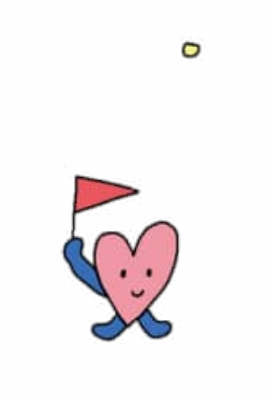
서울시 15개 주거복지센터와 120여 명의 활동가는 '주거약자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복지를 실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우리 협회는 주거복지센터의 기틀을 다지고 현장의 경험을 담아 새로운 주거정책을 제안해 왔으며,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이 주민과 함께 주거권 옹호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국사회는 2012년 서울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제정과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거복지 제도의 결실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 이후 서울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재개발과정에서 무허가 정착지가 강제 철거되었고 가난한 주민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도시빈민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1989년 영구임대주택이라는 한국 최초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었습니다. 이처럼 주거복지의 역사는 곧 주거빈곤에 맞선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이번 서울대회를 통해 아시아 반빈곤운동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나누고 서로의 활동을 따뜻하게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 정부의 주거정책이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을 누리며 공존하는 진정한 '주거안정 정책'이 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상임대표 한선혜



세션1

아시아의 사회보장 현실과 나아갈 길

좌장.

| 김교성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1. 일본의 빈곤 현황과 공적부조의 문제점

| 기타시마 쇼고 (생명의 보루 소송 변호사, 사회복지사)

발표2. 격차 좁히기: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 현황

| 앤디 (유피에이 주민조직가)

발표3. 홍콩의 빈곤 현실과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 응와이퉁 (소코 주민조직가)

발표4. 상처 입은 섬과 낙인을 짊어진 사람들: 대만의 빈곤 경험 당사자들이 겪는 낙인, 행동, 그리고 사회변화

| 아용 추 (인생백미 활동가)

발표5. 발굴되는 빈곤과 증명해야 하는 권리: 한국의 불평등과 제도의 배제

| 김산하(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플로어 토론

발표1

일본의 빈곤 현황과 공적 부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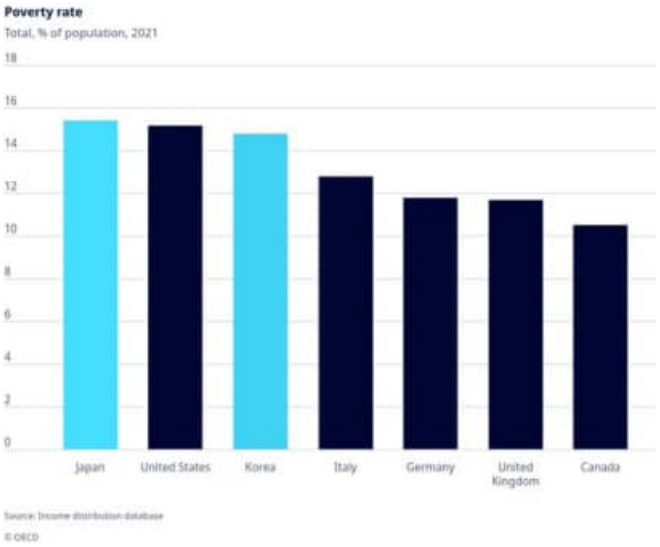
기타시마 쇼고 | 생명의 보루 소송 변호사, 사회복지사

일본의 빈곤 실태와 공적부조의 문제점



2026년 10월 16일
변호사·사회복지사 기타시마 쇼고
(Kitashima Shogo)

1 일본의 빈곤 실태



일본의 상대적 빈곤율
2021년 상대적 빈곤율
일본: 15.4%
한국: 15.1%
2011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국이 더 높았으나,
2019년 이후에는 일본이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약 20년 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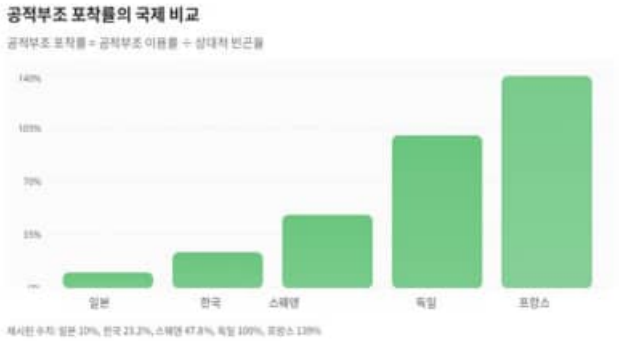
1 일본의 빈곤 실태

공적부조 이용자 수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COVID-19 전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1 일본의 빈곤 실태

공적부조 포착률: 공적부조 이용률 / 상대적 빈곤율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 가운데
공적부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10%에 불과하다.



2-1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는 공적부조

왜「생활보호만큼은 받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생활보호 이용인(수급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오해·편견·불관용·차별이 널리 퍼져 있다.

「일하지 않고 돈을 받는다」

「게으르다」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　그 결과,「생활보호만큼은 받고 싶지 않다」는 강한 기피감이 형성된다.



2-1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게 되는 공적부조

정부의 공적부조 이용 촉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비루한 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약자인 척해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만 국민이 된다면 일본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현 내각총리대신의 발언)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활보호에 대한 기피감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해·편견·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고 생각된다.

2-2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생활보호

일본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미즈기와 작전(水際作戦)

　미즈기와작전이란, 생활이 곤궁한 사람이 공적부조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아왔을 때, 담당자가 정식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내는 관행을 말한다.

→ 누구에게나 신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신청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 신청하러 온 사람의 존엄을 훼손하는 말을 하며 돌려보내는 사례도 많아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2-2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생활보호

일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즈기와작전



신청 창구를 찾아온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례가 있다.

「65세 미만이면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친족에게 부양할 수 있는지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 소유의 집이라면 매각한 후에 신청하십시오.」
「임대료가 비싼 주택에 사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창구에서 돌려보내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　이러한 대응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생활곤궁자는 공적부조 이용을 주저하게 되고, 그 결과 더욱 심각한 빈곤에 빠질 수 있다.

2-2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생활보호



자동차 보유가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현실

일본 정부는 공적부조 이용인이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동차를 소유한 생활곤궁자가 공적부조를 신청하려 해도, 자동차를 처분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많은 생활곤궁자가 「자동차냐 공적부조냐」라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방에서는 자동차를 선택하고 차 안에서 생활하는 홈리스 상태에 놓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 자동차가 없으면 취업이 어려운 지역도 많은 만큼, 공적부조를 이용하면서 자동차를 잃어 취업 기회까지 잃는 사람도 발생한다.

2-3 이용해도 생활하기 어려운 공적부조



반복되어 온 공적부조 급여기준의 인하

그럼에도 공적부조 기준액은

2004년 노령가산의 축소·폐지

2013년부터의 사상 최대 규모의 생활부조 기준 인하

2015년 주택부조 기준 및 동계가산 인하

2018년부터의 생활부조와 모자가산·아동양육가산 등의 인하 등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왔다.

이용인들로부터 「이 금액으로는 생활할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번역자 주) 가산: 기준 급여에 추가되는 금액

3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장법」으로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제안하는 「생활보장법」

개별 사건의 현장과 사법의 장에서의 활동을 축적하는 한편, 현재의 「생활보호법」을 대신하여 다음 내용을 담은 「생활보장법」의 제정을 목표로 활동해 나가고자 한다.

① 권리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할 것
② '미즈기와작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을 마련할 것
③ 보호기준 결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할 것
④ 생활보호 기준에 이르기 직전의 생활곤궁층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
⑤ 케이스워커를 증원하고 전문성을 확보할 것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국 헌법 전문 (일부 발췌)
우리는 전세계 국민이 다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이번에 여러분과 아시아 각 지역의 현황에 대해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변호사·사회복지사 기타시마 쇼고 (Kitashima Shogo)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기타시마 쇼고 北島 正悟 |
생명의 보루 소송 변호사, 사회복지사

1984년 이시카와현 출생. 2012년 변호사로 등록했으며, 2016년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고 기타시마 법률사무소를 설립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드물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함께 보유한 변호사로서, 노인 · 장애인 · 생활곤궁자에 대한 법률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법 · 복지 · 의료 분야의 전문직들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표2

격차 좁히기: 필리핀의 빈곤과 불평등 현황

앤디 | 유피에이 주민조직가

2026년 현재 필리핀은 빈곤 감소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지역, 소득계층, 사회 부문 간에는 여전히 상당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고용 증가가 빈곤율을 낮추는 데 기여했지만, 부, 기회, 교육, 서비스 접근성의 격차는 여전히 포용적 발전을 가로막는 과제로 남아 있다.

빈곤 현황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의 최신 공식 빈곤통계에 따르면 빈곤가구 비율은 2025년 6.4%로 감소했으며,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모든 지역에서 빈곤율이 하락했다. [psa.gov.ph]

이러한 개선 이전인 2023년에는 전체 인구 가운데 15.5%가 빈곤 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약 1,750만 명의 필리핀인이 국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pip.worldbank.org]

빈곤 감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된 경제성장.
- 노동시장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 특히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가구소득 증가.

• 정부의 사회보장 및 빈곤감소 프로그램.[psa.gov.ph]

그러나 빈곤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지역과 집단에 집중되어 있다.

• 농촌 지역공동체.
• 농업 및 어업 가구.
• 원주민과 지리적으로 고립된 지역.
• 민다나오 일부 지역 및 역사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온 지역들.

다차원적 빈곤

소득만으로는 결핍의 전체 모습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 2026년 8월 필리핀 통계청은 2024년 필리핀인의 12.8%가 다차원적 빈곤 상태에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교육, 건강, 주거, 위생, 식수 접근, 고용 등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다는 의미다. [psa.gov.ph]

필리핀의 다차원적 빈곤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는 소득빈곤선 위에 있는 필리핀인 가운데서도 기본서비스 이용과 삶의 질 측면에서 여전히 상당한 장벽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psa.gov.ph]

필리핀의 주관적 빈곤율(Self-Rated Poverty), 2026년

2026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소셜웨더스테이션(Social Weather Stations, SWS. 편집자 주: 필리핀의 대표적인 민간 비영리 사회조사,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최신 조사에 따르면 필리핀 가구의 49%가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평가했다. 이는 2026년 3월의 52%에 비해 3%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sws.org.ph]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필리핀 가구의 49%가 자신을 빈곤하다고 평가했다. [sws.org.ph], [philstar.com]
• 즉 스스로 빈곤하다고 판단한 가구는 약 1,360만 가구에 달한다. [sws.org.ph]
• 37%는 자신을 빈곤하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3월의 35%보다 증가한 수치다.[philstar.com]
• 14%는 자신을 빈곤과 비빈곤의 경계선에 있다(borderline poor)고 평가했다.[sws.org.ph]

2026년 필리핀 빈곤선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식 빈곤선은 2026년 8월 발표된 필리핀 통계청의 2025년 빈곤통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 전국 기준 5인 가구 월 14,634페소. [psa.gov.ph] (편집자 주: 한화 약 31만 원)

- 이는 한 가구당 하루 약 487.80페소, 5인 가구를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약 97페소에 해당한다. [psa.gov.ph] (편집자 주: 한화 약 만 원, 2천 원)

빈곤선은 기본적인 식품 및 비식품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이 이 기준보다 낮은 가구는 빈곤가구로 분류된다.

불평등의 현황

2026년 필리핀에서는 빈곤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이 여전히 중요한 발전 과제로 남아 있다. 공식 빈곤율이 하락하고 경제성장이 이어졌지만, 소득과 자산, 교육, 보건의료, 고용기회는 지역과 사회집단에 따라 여전히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 [psa.gov.ph]

현재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소득불평등 지표는 세계은행의 빈곤 및 불평등 플랫폼(Poverty and Inequality Platform)에서 발표한 지니 계수로, 2023년 기준 39.34였다. 필리핀은 중간에서 높은 수준의 불평등을 보이는 국가에 해당하는데, 이는 가구 간 소득이 불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ip.worldbank.org]

공식 빈곤율은 2025년 전체 인구의 9.7%까지 감소했지만, 많은 필리핀인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6년 6월 소셜웨더스테이션 조사에서는 필리핀 가구의 49%가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평가했다. [psa.gov.ph]

이러한 차이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사회 전체에 동일하게 체감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불평등의 주요 형태

1. 소득 불평등

고소득 가구의 소득은 저소득 가구보다 여전히 상당히 높으며, 특히 농업 및 비공식부문에서 일하는 가구에서 이러한 격차가 두드러진다. 많은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며, 복지혜택과 고용안정성도 제한적이다.

2. 지역 간 불평등

경제성장은 메트로 마닐라, 칼라바르손, 센트럴 루손 등 도시화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투자, 기반시설, 고용기회가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다. 반면 민다나오 일부 지역과 농촌을 비롯한 빈곤한 지역에서는 여전히 더 높은 빈곤율과 낮은 소득수준이 나타나고 있다. [psa.gov.ph]

3. 교육 불평등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학교자원 부족, 기술 접근성 부족,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불이익은 이후 낮은 소득 가능성과 제한된 사회이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psa.gov.ph]

4. 건강 불평등

양질의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은 도시와 농촌, 그리고 소득집단 사이에서 여전히 불균등하다. 열악한 건강상태는 생산성을 제한하고 빈곤과 불평등의 악순환을 강화할 수 있다. [psa.gov.ph]

5.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인터넷 접근, 디지털 기기, 기술 활용 능력의 격차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농촌지역 및 저소득 가구는 디지털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psa.gov.ph]

불평등의 원인

필리핀의 불평등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부와 생산자산이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 양질의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이 불평등하다.
- 생산성이 낮은 농업 및 비공식부문 일자리에 대한 의존이 높다.
- 빈곤가구가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필리핀 불평등의 배경에 있는 주요 쟁점

1. 빈곤선이 실제 생활고를 과소평가할 수 있음

주요한 비판 가운데 하나는 공식 빈곤선이 많은 필리핀 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생활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리핀 통계청(PSA)의 가장 최근 빈곤선은 2025년 기준 5인 가구 월 14,634페소, 즉 5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하루 약 97페소다. 이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소득을 얻는 가구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의료비, 교육비 등 기본적인 지출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공식적으로는 비빈곤가구로 분류된다. [psa.gov.ph]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공식 빈곤선은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생존이 가능한지만을 측정하고 있다.
- 상승하는 도시의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 빈곤선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며, 한 번의 위기만으로도 빈곤에 빠질 수 있는 가구들이 존재한다.

이는 2025년 공식 빈곤율이 9.7%인 반면, 2026년 6월에는 필리핀 가구의 49%가 스스로를 빈곤하다고 평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격차는 많은 사람들이 공식 통계가 자신들의 실제 삶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정부는 현금 지원, 식료품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많은 빈곤·취약가구는 여전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 불완전한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 지원 전달의 지연.
- 대상 선정 과정의 오류.
- 비공식부문 노동자에 대한 제한적인 보장.
- 생활비에 비해 부족한 급여 수준.

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충격, 급격한 물가상승,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여 취약가구에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부기관들 역시 조사 결과와 갱신된 대상자 선정 시스템을 활용하여 빈곤 및 기아 대응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3. 경제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음

필리핀 경제는 계속 성장해왔고 빈곤율도 감소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의 성과는 특정 지역과 산업, 특히 주요 대도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농촌 공동체, 농업노동자, 어민,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은 경제성장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경우가 많다. [psa.gov.ph]

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 부의 축적은 여전히 고소득층에 집중되어 있다.

- 많은 노동자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머물러 있다.
- 도시와 농촌 사이의 지역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pip.worldbank.org]
- 빈곤 관련 통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평등은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은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불평등을 보이고 있으며, 지니 계수는 39.34다. 이는 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여전히 불균등하게 분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pip.worldbank.org]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 일부 가구는 소득과 자산 증가의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 다른 가구들은 공식적으로 '비빈곤층'으로 분류되더라도 여전히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 양질의 교육, 보건의료, 디지털 연결성, 고용기회에 대한 접근 역시 불균등하다.

필리핀의 부패 문제

홍수방지 사업을 둘러싼 부패 문제는 공개 조사, 의회 조사, 감사 및 반부패 활동의 대상이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감시단체, 조사기관들은 수십억 페소, 경우에 따라서는 수조 페소에 달하는 홍수방지 사업을 조사하면서 공공재정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검토해 왔다.

홍수방지 사업의 부패 문제는 열악한 거버넌스와 빈곤, 사회적 불의 사이의 강한 연관성을 보여준다. 홍수 예방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이 부패로 사라질 경우, 반복되는 홍수, 생계수단의 상실, 주택 피해, 기본서비스 접근 제한 등을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취약한 지역공동체다. 이는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의를 만들어낸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공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pcij.org]

결론

공식 자료는 빈곤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필리핀의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공식 빈곤선은 실제 생활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취약성으로 인해 취약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국가의 공식 빈곤통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필리핀인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다.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빈곤 측정, 더욱 강력한 사회보장 제도,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

앤디 Alejandro Lizano Marcelino | 유피에이 주민조직가

앤디는 20년 이상 필리핀의 리살, 케손, 라구나와 나보타스, 파사이 등 여러 지역에서 풀뿌리 조직, 원주민, 어민, 도시빈민 공동체와 함께 활동해 온 경험 많은 주민조직가입니다.

현재 유피에이(UPA, Urban Poor Associates)의 주민조직가로 활동하며,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원주민 공동체와 가구를 지원하고 주민조직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국경없는의사회와는 별개의 국제의료단체인 Doctors of the World (Medecins du Monde)에서 선임 주민조직가 및 환경보건 현장활동가로 일하며 보건교육, 환경 실태조사, 조직 역량강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COPE Foundation, Inc.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태풍 온도이 이후의 구호활동을 이끌고, 주거권과 아동권리를 옹호했으며, 라구나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MAPAGPALA와 같은 연대체를 조직했습니다.

타를락, 리살, 케손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지도자와 원주민 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성인지감수성과 재난위험관리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활동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University of the East에서 역사학을 전공했으며, 주민조직화, 퍼실리테이션, 프로그램 실행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LOCOA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인도 뭄바이를 비롯한 해외에서도 주민조직가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MAKE A CITY
BEYOND PROFIT

발표3

홍콩의 빈곤 현실과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응와이퉁 | 소코 주민조직가

(1) 간박방 조례(簡樸房條例, Basic Housing Units Ordinance) (2026년 3월~)

(편집자 주: 간박방(簡樸房, Basic Housing Unit)은 기존 분할주택(劏房, Subdivided Unit) 가운데 법정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정부의 인정을 받은 주거단위를 뜻함. 분할주택은 하나의 기존 주택을 여러 개의 작은 방으로 나눠 각각 임대하는 주거형태로, 화장실·주방 등을 공동사용하거나 매우 협소한 경우가 많음. 기존 분할주택을 1년 내로 등록한 뒤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개보수하고, 이후 최소기준을 충족했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법적으로 계속 임대할 수 있음.)

간박방의 요건:

- 최소 내부 바닥면적은 8㎡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유효 높이는 최소 2.3m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존 출입구의 방화문을 유지해야 하며, 내부 복도의 유효 폭은 최소 1.0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국은 약 80,000개의 분할주택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등록된 분할주택은 약 34,000호에 그쳤습니다.

분할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과도기주택(過渡性房屋, Transitional Housing, 편집자 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등 긴급한 주거 필요가 있는 가구에 제공하는 단기 주거) 가운데 최대 180호를 '예비 주택(reserve units)'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홍콩 정부 역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세입자가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부 집주인은 분할주택 임대를 포기할 수 있으며, 간박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보수 이후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례:

청사완(長沙灣)의 이와빌딩(義華大廈)은 건령 61년의 건물로, 240개가 넘는 분할주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민의 90%가 60세 이상입니다. 이들 고령 주민들은 생활 기반과 지역사회 관계 때문에 도심 지역을 쉽게 떠날 수 없습니다. 2026년 2월, 집주인이 건물을 간박방 기준에 맞게 개보수하려 하면서 주민들은 퇴거를 요구받았습니다.

(2) 빈곤선 폐지

홍콩 정부는 2022년 이후 기존의 빈곤선을 더 이상 적용·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는 '맞춤형 빈곤 완화(精準扶貧, Targeted Poverty Alleviation)' 정책을 중심으로 빈곤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다음 세 집단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 분할주택 거주자: 214,200명 (2021년)
- 한부모가구 구성원: 203,900명 (2024년)
- 노인가구 구성원: 717,600명 (2024년)

이를 단순 합산하면 1,135,700명입니다.

한편 옥스팜 홍콩의 「2023 홍콩 빈곤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빈곤선 기준으로 빈곤 상태에 놓인 사람은 1,364,100명입니다.

또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선 아래에 있는 저소득 노동자는 209,800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부가 기존 방식의 빈곤보고서와 빈곤선 발표를 중단하면서 이러한 수치는 더 이상 정부 빈곤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3) 근로가족수당(在職家庭津貼, Working Family Allowance, WFA)

(편집자 주: 근로가족수당(WFA)은 일정한 근로시간·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급되는 현금급여 제도임. 홍콩의 공공부조인 종합사회보장원조(綜合社會保障援助, CSSA)와는 중복 수급할 수 없음.)

근로가족수당은 정말 자립을 장려하고 세대 간 빈곤을 완화하고 있을까요? 일정한 근로시간 요건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근로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가구가 기본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월 14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18일을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성질환이 있거나 가족을 돌봐야 해서 매달 18일 이상 일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 근로시간 기준 때문에 수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비정규 노동자는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신청은 직전 6개월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근로시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보충노동 확대계획(補充勞工優化計劃, Enhanced Supplementary Labour Scheme, ESLS)의 확대

(편집자 주: 보충노동계획(Enhanced Supplementary Labour Scheme, ESLS)은 기업이 현지에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홍콩 밖에서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홍콩 정부는 식당 종업원, 배달 노동자, 판매직, 운전기사, 미용사, 경비원 등 저임금·비숙련 직종에도 해외 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코는 이러한 정책이 홍콩의 저소득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전일제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5) 홈리스의 존엄을 위한 투쟁

5.1

홍콩 정부와 사회에 '홈리스 친화 정책(無家者友善政策, Homeless Friendly Policy)'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2

홈리스 숙소(homeless hostel accommodation, 편집자 주: 홍콩 사회복지서의 지원을 받는 단기숙

소)의 거주기간을 현재 6개월에서 최소 2년으로 연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5.3

홈리스 친화 정책에 '주거우선(하우징 퍼스트, Housing First)' 모델을 도입하고, 숙소에 간호사, 의사, 심리전문가, 물리치료사 등 충분한 재활·보건의료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5.4

홈리스 아웃리치팀에 의사 등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5.5

거리 홈리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5.6

홈리스와 정신장애 당사자, 출소자 등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리빙룸(社區客廳, Community Living Room, 편집자 주: 저소득가구에게 공용 주방·세탁·학습·휴식 공간과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현재는 분할주택 주민만 대상임)'을 조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5.7 홈리스 소지품의 무단 철거·폐기에 맞선 소송:

2015년, 2017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에 걸쳐 홍콩 정부는 사전 통보 없이 홈리스들의 소지품을 철거·폐기했습니다. 소코는 이러한 조치가 취약한 상황에 놓인 홈리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홈리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홍콩 정부를 상대로 세 차례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Since 1972

홍콩의 빈곤 현실과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응와이퉁 (소코 주민조직가)

소코

(SoCO,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홍콩

2026년 10월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열악한 주거: 분할주택, 철창집, 침상형 주거, 칸막이방, 옥탑방 등

(편집자 주: 철창집(籠屋, Cage Home)은 침상 공간을 철망 등으로 구획해 임대하는 극도로 협소한 주거형태로, 배드스페이스(床位寓所, Bedspace Apartment)의 대표적 형태임. 배드스페이스는 한 주거단위 안에서 여러 개의 1인용 침상 공간을 임대하는 형태이며, 칸막이방(板間房, Cubicle)은 한 집을 칸막이로 나눈 작은 방으로 화장실·주방 등을 공동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2026년 홍콩에는 108,200개가 넘는 분할주택이 있으며, 약 107,000가구가 이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약 215,700명이 이러한 도심의 열악한 주거에 세 들어 살고 있습니다.

소코는 1989년부터 홍콩의 빈곤과 주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왔습니다.

왜 저소득층 주민들은 열악한 도심 지역에 계속 거주할까요?

1. 일용직이나 육체노동·단순노무 일자리를 구하기 쉽습니다.
2. 교통비와 이동시간이 적게 듭니다.
3. 돈을 빌리거나 일자리를 소개받는 등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기 쉽습니다.

사진 속 사례는 **칸막이방**입니다. **월세는 최대 HK$2,500이며, 화장실을 다른 10명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주거환경: 천장이 파손되어 있고 빈대가 있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비위생적입니다.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香港劏房問題嚴重，按2020年估算全港有11萬戶屬於「不適切居所」。今屆政府設「解決劏房問題」工作組，香港社區組織協會於今年1月至5月期間訪問了497名不適切居所住戶，至少三成劏房會被界定為劣質劏房，即相當於3.3萬戶。

調查發現88.5%受訪者表示，同意政府先安置，再取締劣質劏房，亦有6.2%受訪者不同意取締，因為害怕自己居住的劏房被拆，無家可歸。

有劏房戶表示，現時因身份問題未能合乎資格申請公屋，依靠綜援過活，無法負擔比現時更貴的租金，同意政府需解決劣質劏房問題，但同時需提供安置。



사회행동과 대중교육:

소코는 현장 조사·연구, 기자회견, 전시, 출판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사회와 입법회 의원, 정부를 설득하여 주거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간박방 조례 (2026년 3월 등록 시작) (주택국)

간박방 조례의 요건:

- 최소 내부 바닥면적은 8㎡ 이상
-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유효 높이는 최소 2.3m 이상
- 기존 출입구의 방화문을 유지, 내부 복도의 유효 폭은 최소 **1.05m** 이상

등록 현황: 주택국은 약 80,000개의 분할주택이 간박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개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등록된 분할주택은 약 34,000호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계획 / 전망: 분할주택에서 퇴거해야 하는 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과도기주택 가운데 최대 180호를 '예비 주택'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는 홍콩 정부 역시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세입자가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일부 집주인이 분할주택 임대를 포기할 가능성
- 간박방 기준에 맞춘 개보수 비용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왼쪽 사진 사례 (전용 화장실이 있는 분할주택)

- 응아이(Ngai) 씨, 66세. 건강이 좋지 않은 독거노인입니다.
- 월세는 3,500홍콩달러(편집자 주: 한화 약 61만 원)이며 면적은 8㎡ 미만입니다. 천장이 파손되어 있지만 집주인은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집주인은 해당 주택을 주택국에 등록할 계획이 없다며, 응아이 씨에게 2년 이내에 퇴거하라고 통보했습니다.

2026년 2월 퇴거 사례

집주인이 건물 전체를 간박방 기준에 맞게 개보수하려 하면서 모든 세입자들이 퇴거를 요구받았습니다.



청사완 이와빌딩(長沙灣 義華大廈)

- 61년 된 건물
- 240개 이상의 분할주택
- 주민의 90% 이상이 60세 이상;
-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비교적 저렴하여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 숙소(시설)이라고 표현

간박방 조례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은 2026년 3월까지 퇴거를 요구받았습니다.

일부 세입자는 아직 고정 임대기간(死約)이 끝나지 않았지만, 2022년 도입된 분할주택 임대규제의 '2+2' 임대기간 보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계와 일상생활 때문에 이 지역을 떠나기 어렵습니다.

라우 씨는 67세 남성입니다. 그는 퇴거를 거부하고 다른 주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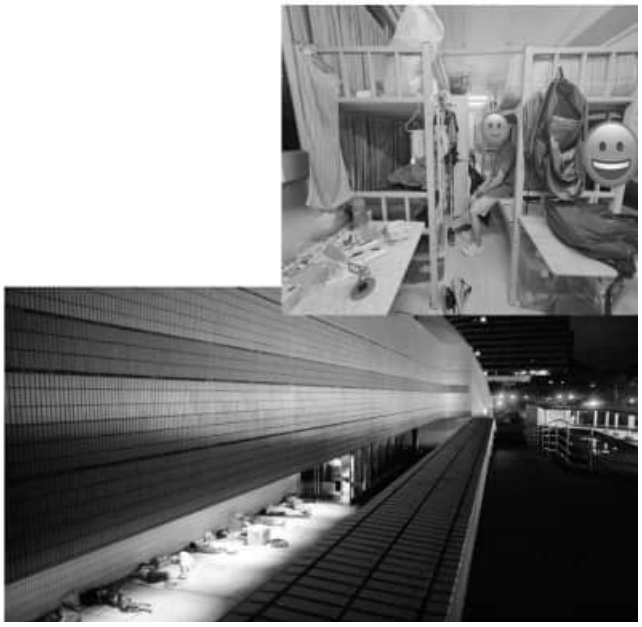
1. 건물의 각 가구를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했습니다.
2. 다른 주민들과 옥상에서 주민회의를 열었습니다.
3. 기자회견을 열어 분할주택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사회에 알렸습니다.
4. 그의 월세는 처음 HK$1,110에서 2026년 HK$2,500까지 올랐습니다.
5. 그는 이곳에서 27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이 지역에서 생활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살고 있으며, 과거 여러 곳에서 요리사로 일했습니다.

홈리스 친화 정책이 없는 홍콩

소코는 1999년부터 홈리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의 홈리스 문제:

- 홈리스의 권리를 보호하는 **홈리스 친화 정책**이나 관련 조례가 **없음**
- **정부가 홈리스의 소지품을 철거·폐기한 사례**가 최소 세 차례 발생
- NGO가 도심 지역에 홈리스 숙소를 확대하려 할 때 홈리스에 대한 낙인과 반대에 부딪힘
- **여가문화서비스서가 관리하는 일부 공원에서는 오후 9시 이전에 누워 있거나 잠을 자는 것이 금지됨**
- **정부 지원 홈리스 숙소 거주자의 60%**는 6개월 이상 머물 수 없음
- 정부 지원 홈리스 숙소에서 **사생활을 보장받기 어려움**
- **거리 홈리스의 소지품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



60세 미만 1인 가구가 겪는 주거의 어려움



정부 지원 홈리스 숙소: 최대 6개월까지만 거주 가능

민간임대주택: 창문도 없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 1.8㎡에 불과한 공간의 월세가 최대 2,500홍콩달러(편집자 주: 한화 약 44만 원), 빈대가 발생하는 등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

공공임대주택의 긴 대기기간:

1. **점수제 때문에 대기기간이 매우 김:** 30세에 신청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기까지 최소 25년을 기다려야 함
2. **주택서에서 보낸 서신에 3 차례 답변하지 않으면** 공공임대주택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3.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계속 오르는 임대료** 때문에 약 2년마다 거처를 옮기는 경우가 많음

홈리스 당사자들의 세 차례 홍콩 정부 상대 소송 (2012년, 2015년, 2022년)





홈리스 친화 정책이 없는 홍콩:

- **민정사무총서(Home Affairs Department)가 사전 통보 없이** 삼수이포(深水埗)와 야우마테이(油麻地)의 홈리스 소지품을 세 차례 철거·폐기했습니다.
- 소코는 피해를 입은 홈리스 당사자들을 조직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절반가량은 소송을 포기했습니다**. 언론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원고 가운데 약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 소코 활동가들은 **자원활동 변호사들의 법률지원**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 법원은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철거·폐기된 **소지품이 실제로 자신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2022년의 소송에서는 패소할 경우 홈리스 당사자들이 27,000홍콩달러(편집자 주: 한화 약 468만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소코의 홈리스 활동: 현장 조사·연구, 입법회 의원과의 면담, 홍콩 홈리스 축구팀 조직 및 홈리스 월드컵 참가(2005~2026), 홈리스 러닝팀, 출판 활동 등.

목표: 홈리스 당사자들이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빈곤의 정의와 복지정책 방향의 전환

(빈곤위원회(扶貧委員會, Commission on Poverty), 2026년 6월)



홍콩 정부는 2026년 6월부터 소득을 기준으로 한 빈곤선을 공식적으로 **더 이상 설정하지 않습니다** (빈곤선 = 가구 중위소득의 50%)

이에 따른 영향 → 빈곤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사라짐

왜 빈곤선을 사용하지 않는가? (빈곤위원회, 2026년 6월):

1. 빈곤선은 소득만 평가하고 자산은 반영하지 않기 때문 (은퇴한 고령자도 빈곤층으로 집계되는 것을 막기 위함)
2. 현금이 아닌 복지 혜택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 (의료, 교육 등의 지원)
3. 상대적 빈곤 개념 자체의 한계 (사회 전체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빈곤선도 함께 상승)

빈곤의 정의와 복지정책 방향의 전환

(빈곤위원회(扶貧委員會, Commission on Poverty), 2026년 6월)



다차원 분석 틀의 7개 영역

따라서 → "대상을 특정하고 자원을 집중한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하는 '취약집단'은 누구인가?

HKP = 홍콩 전체 인구

- 분할주택 거주자 → 214,200명 / 홍콩 인구의 약 3%
- 한부모가구 → 203,900명 / 약 3%
-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717,600명 / 약 9.5%
- **앞으로는 가족돌봄자(Carer / Caregiver)도 포함될 것인가? 다른 집단은? 왜 3~4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과연 이것이 충분히 '맞춤형'인가? '취약집단'으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소수인종??? 홈리스??? 장애인???

의료비 및 감면제도 개편 (2026년 1월):

의료비 감면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높은 벽' (병원관리국, 2026년)



공공의료 진료비 개편

- 응급실 진료비: 180홍콩달러 (한화 약 3만 원) → 400홍콩달러 (한화 약 7만 원)
- 입원 병상료: 하루 120홍콩달러 (한화 약 2만 원) → 300홍콩달러 (한화 약 5만 원)

의료비 감면 신청

- 향후 6개월 이내에 만성질환 진료 예약이 있는 경우에만 의료비 감면 신청 가능
- 최근 6개월간의 은행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같은 기간의 소득 내역을 항목별로 소명해야 함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의료비 및 감면제도 개편 (2026년 1월):

의료비 감면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높은 벽' (병원관리국, 2026년)



의료비 감면 자격을 증명하는 어려움

- **신청 과정에서 큰 비용과 시간 부담** (소득 관련 증빙 자료 발급 비용, 서류 준비와 신청을 위해 여러 차례 오가야 하는 시간 부담)
- 만성질환 진료까지 **긴 대기시간** (신규 환자의 경우 65~98주 대기)과 **매우 비싼** 민간 병원
- 그렇다면 어떻게 진료받고 있을까? → **홍콩에서 진료 받는 대신 중국 본토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늘어남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의료비 및 감면제도 개편 (2026년 1월):

의료비 감면과 '스스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높은 벽' (병원관리국, 2026년)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홍콩과 중국 본토의 **의료체계가 서로 달라** 진료기록이 상호 인정되지 않음
- 홍콩의 의료안전망 밖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예상하지 못한 높은 의료비를 부담할 위험**

근로가족수당(WFA): 근로시간 기준과 돌봄정책의 충돌 (WFSFAA, 2023)



근로가족수당(WFA) 제도

- **목적:** 자립을 장려하고 세대 간 빈곤을 완화
- **신청 자격:**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구 단위 신청. 근로시간·소득·재산 기준 적용
- **급여:**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수당·중간수당·상위수당 지급, 자격을 충족하는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 15세 미만 또는 15~21세 전일제 학생)

근로가족수당(WFA): 신청 과정의 어려움 (WFSFAA, 2023)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응:

- **현금 지급되는 임금과 불규칙한 근로시간**
  - 일용직 노동자는 월별 근로시간과 임금 기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근로가족수당 자격 확인이 어려움
    - **현금으로 받은 임금을 꾸준히 은행계좌에 입금**하거나, 공식 자기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안내
-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 배달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신청서 작성을 지원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근로가족수당(WFA): 근로시간 기준과 돌봄정책의 충돌 (WFSFAA, 2023)



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응:

- 경직된 행정절차
  - 여전히 고용주의 임금 증빙을 요구
    - 소코가 근로가족수당 담당자와 직접 소통하며 지원

또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 **근로시간 기준 완화는 한부모가구에만 적용되고 있음. 다른 취약한 사람들은?**
  - 한부모가구 → 월 최소 36시간
  - 비한부모가구 → 월 최소 144시간
  - 가족돌봄자, 고령자,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홍콩 정부가 '실버경제(Silver Economy)'를 장려하면서도, 고령자에게 동일한 근로시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아동수당을 근로시간 기준과 분리할 것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지역 치과지원 프로그램(CDSP) (2025년~)

서비스 범위와 실제 치과진료 필요의 불일치 (위생서, 2026년 8월 24일)



지역 치과지원 프로그램(CDSP) 개요

- **대상:**
  eHealth에 등록된 홍콩의 저소득 주민
  - 노령수당(OALA) 수급자
  - 병원관리국(HA) 의료비 감면 대상자
  - 추천을 받은 홈리스
- **본인부담금:** 일부 치료에 대해 치아 1개당 최대 50홍콩달러(한화 약 8,600원) 또는 100홍콩달러(한화 약 17,000원)
- **지원 범위:** 구강검진, 연 1회 스케일링, 충전치료, 발치, 탈착식 의치 등을 지원하지만, 치료별 이용 제한이 있음
  - 예: 근관치료는 365일마다 치아 1개까지
  - 브리지·크라운 제거는 180일마다 브리지 1개 또는 크라운 2개까지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지역 치과지원 프로그램(CDSP) (2026년 1월)

소코는 20년 넘게 공공 치과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Subsidised Services (Assessed by the dentist)	Administration Fee/ Co-Payment Fee (Category A*)	Administration Fee/ Co-Payment Fee (Category B*)
Every 180 days:		
Oral health assessment	The Government will fully subsidise the administration fee	Free
X-ray examination		
Medication for dental pain relief		
Dental filling or extraction		$50 / each tooth
Removal of bridge		$100 / each bridge
Removal of crowns		$50 / each crown
Every 365 days:		
Scaling	The Government will fully subsidise the administration fee	$50
Root canal treatment		$50 / each tooth
Every 5 years or more:		
Fitting of removable dentures	$500 / each set*	$1,000 / each set*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지역 치과지원 프로그램(CDSP) (2026년 1월)

소코는 20년 넘게 공공 치과의료 확대를 요구하며 활동해 왔습니다.



2026년 1월, 드디어 홈리스도 지역 치과지원 대상에 포함
(20년간의 정책 개선 요구 끝에)

- **홈리스는 치과진료 필요가 매우 큼 (오른쪽 사진 2장의 사례 참고)**
- 공공 치과서비스로는 6개월 동안 치아 3개까지만 치료 가능
- 틀니는 남아 있는 치아가 20개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틀니 지원은 5년 동안 최대 2회까지 가능



SoCO
香港社區組織協會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존엄하고 인간다운 삶은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봄에서 자라납니다.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응와이퉁 吳衛東 Ng Wai Tung | 소코 주민조직가

소속 기관: 소코 (SoCO,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1990년 – 현재

1990년부터 1999년까지는 기층 노인가구를 조직하며 주거권, 복지권, 퇴직보장제도, 고령층의 노동권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홈리스와 정신건강 회복 당사자를 조직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주변화된 집단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조사와 연구도 진행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는 홍콩 홈리스 축구팀을 조직해 홈리스 월드컵(Homeless World Cup)에 참가하도록 지원해 왔으며, 2027년까지 총 17개 대회 참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19년까지 홈리스와 거리생활의 현실을 담은 홈리스 생활기록집 · 사진문집을 총 4차례 발간했습니다.

또한 홈리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개인 소지품을 부당하게 철거 · 폐기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5년, 2017년,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홈리스 당사자들의 홍콩 정부 상대 소송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영화 《탁수표류》(濁水漂流, Drifting)는 이러한 소코의 홈리스 활동, 특히 홈리스들이 차별적으로 쫓겨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홍콩 사회에 '홈리스 친화 정책(Homeless Friendly Policy)'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표4

상처 입은 섬과 낙인을 짊어진 사람들 : 대만의 빈곤 경험 당사자들이 겪는 낙인, 행동, 그리고 사회변화

아용 추 | 인생백미 활동가





"이곳은 도시의 가장자리에서 떨어진 우리를 받아 준 공원입니다."

A View from Below:
This park catches us who falling off the urban edge.



• 미디어가 말하지 않는 진실:
주간 이용자의 53%는 지역 주민, 47%는 노숙인



• 취약계층의 삶의 터전:
주민 이용자 중 저소득층 17.7%, 장애인 13.5% (전국 평균보다 높음)
• 소비가 필요 없는 공공 공간: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Poverty in Taiwan: Shadows Amidst Affluence

Beyond the harsh realities of physical survival lies an even deeper crisis: the struggle for dignity and the burden of risk.

풍요 속의 그림자: 대만의 빈곤

생존을 위한 물질적 결핍보다 더 심각한 것은 '존엄'의 훼손과 '위험'의 일상화입니다.

존엄 Dignity

인간으로서의 삶이 정형화된 일면으로만 제한됩니다.
그 틀을 벗어난 이들은 '자격 미달'이자
'도움받을 가치가 없는' 빈곤자로 낙인찍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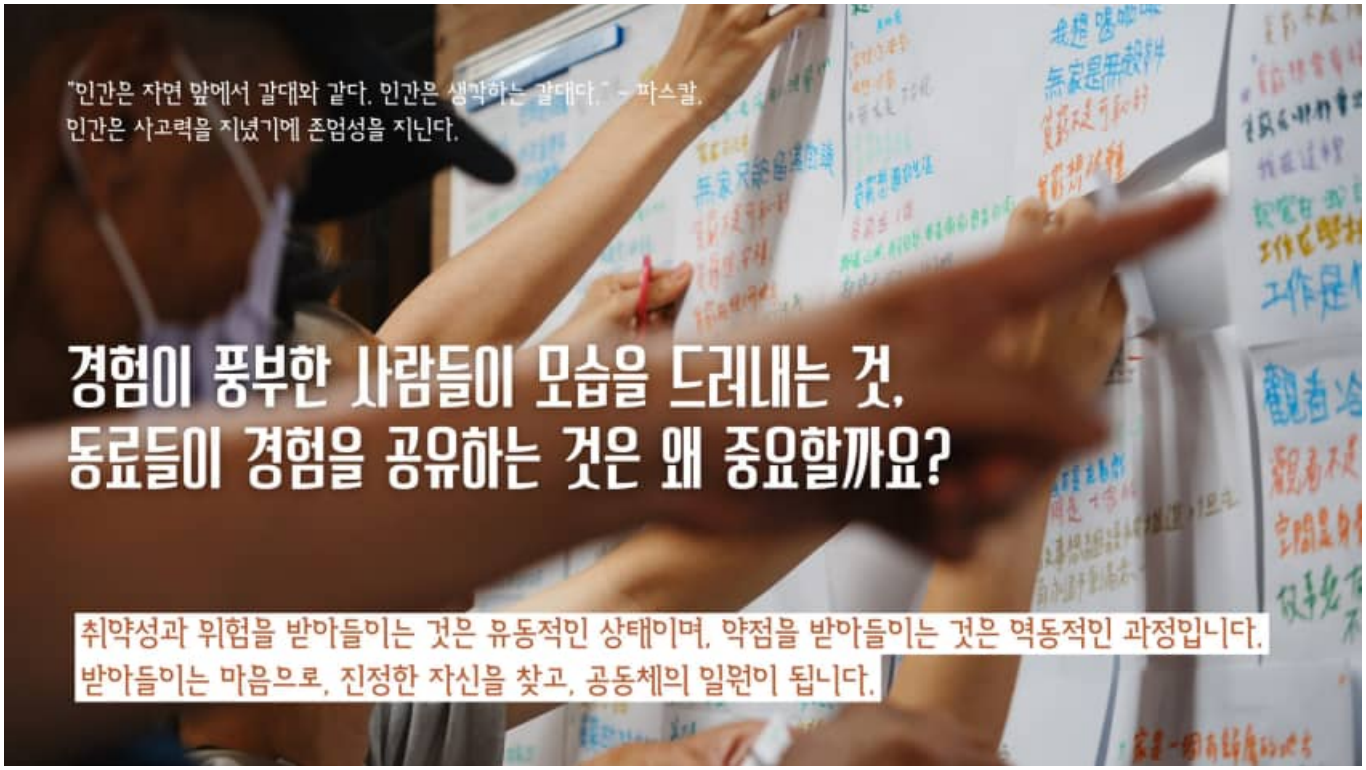
위험 Risk

노숙, 취업 난항 등 다중적 위험에 내몰리지만 이를 받아낼
안전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도 언어로 정의되지 못한
삶들은 어떤 제도적 사각지대로 떨어지게 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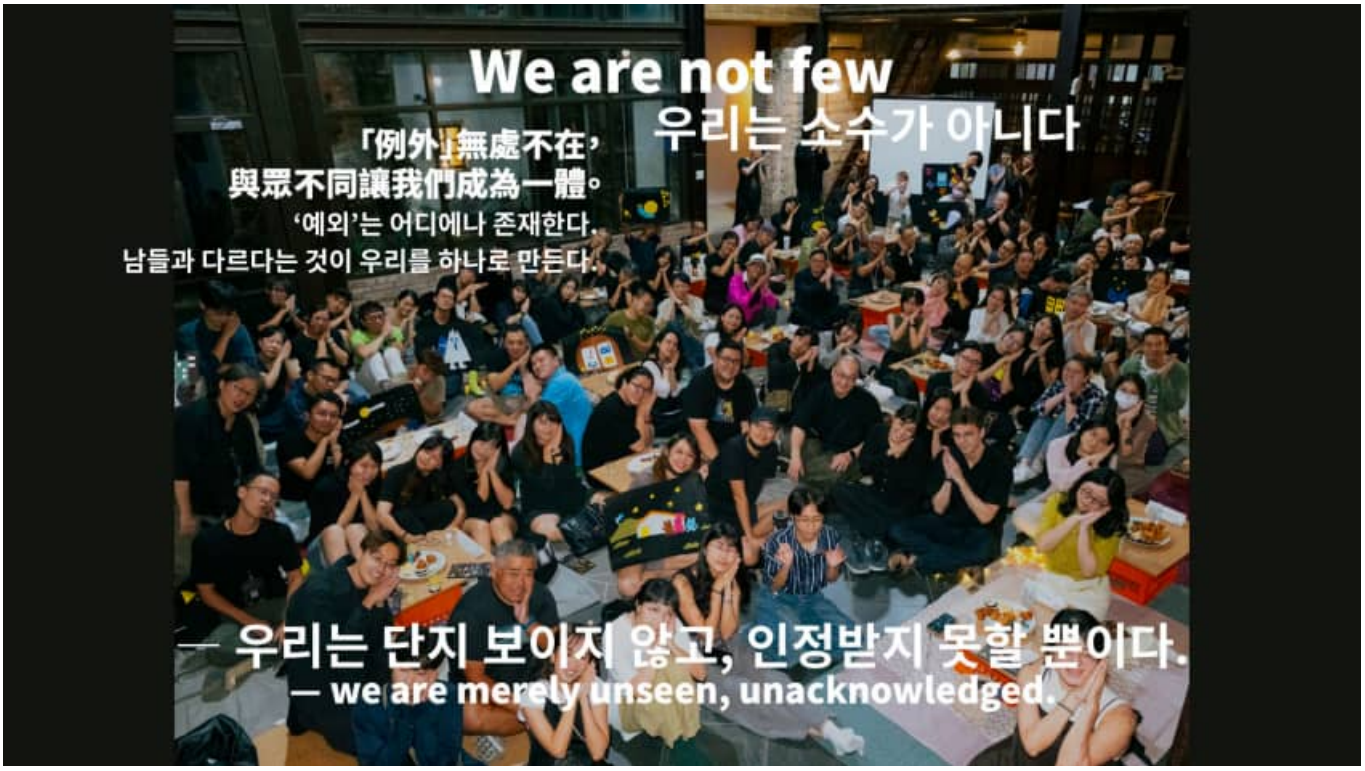

낙인·오명
경청·어려움에 대한 이해
사회적 배제
삶의 불안정
극단적 선택
#지원과
새로운 선택지 제공
빈곤, 선택권 없음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만들기
Do You A Flavor .tw
集力使力・點亮街頭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
我們有其他的選擇
Another Choice for All
포용적 사회


How is Lived-Experience-Led
Action Possible
당사자가 주체가 되는 운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인간은 자연 앞에서 갈대와 같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 파스칼,
인간은 사고력을 지녔기에 존엄성을 지닌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동료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왜 중요할까요?
취약성과 위험을 받아들이는 것은 유동적인 상태이며, 약점을 받아들이는 것은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진정한 자신을 찾고,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인생백미의 프로젝트
Some of our flavorite projects
金鼎獎
여성 홈리스 현장활동 및 동행
샤워 · 세탁 카페
거리에서 살아남는 방법
가이드북 발간
빈곤과 사회복지에 관한
오픈마이크
드랙퀸과 홈리스가
함께하는 축하 행사
공무원의 딜레마:
짧은 보고서


인생백미의 프로젝트
百味分之一的計畫
Some of our flavorite projects
Human Rights Advocacy
인권 옹호 활동
Homeless Cleanup Crew
홈리스 청소팀
Mid-term Shelter Centers
중기 쉼터 운영


We are not few
우리는 소수가 아니다
「例外」無處不在，
與眾不同讓我們成為一體。
'예외'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 우리는 단지 보이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뿐이다.
— we are merely unseen, unacknowledged.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

아용 추 朱剛勇 | 인생백미 활동가

「인생백미(人生百味, Do You a Flavor)」와 「배제 사회를 거부하는 야생 활동가 연대(AWAREs, Alliance of Wild Activists Refusing Exclusive Society)」를 공동 창립했으며, 큐레이터, 디자이너, 작가이자 내향적인 사람이기도 하다.


충격
부양의무자기준
아직도 있음

발표5

발굴되는 빈곤과 증명해야 하는 권리 : 한국의 불평등과 제도의 배제

김산하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발굴되는 빈곤과 증명해야 하는 권리
: 한국의 불평등과 제도의 배제

김산하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재단법인 동천)

2026. 10.

목차

I. 대한민국 빈곤율과 불평등 현황
II.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1.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설정의 문제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3. 낮은 보장수준의 문제
III. 사각지대와 발굴 문제
IV. 예산의 문제
V. 당사자의 의견을 받지 않는 불투명한 제도 운영의 문제

대한민국 빈곤율과 불평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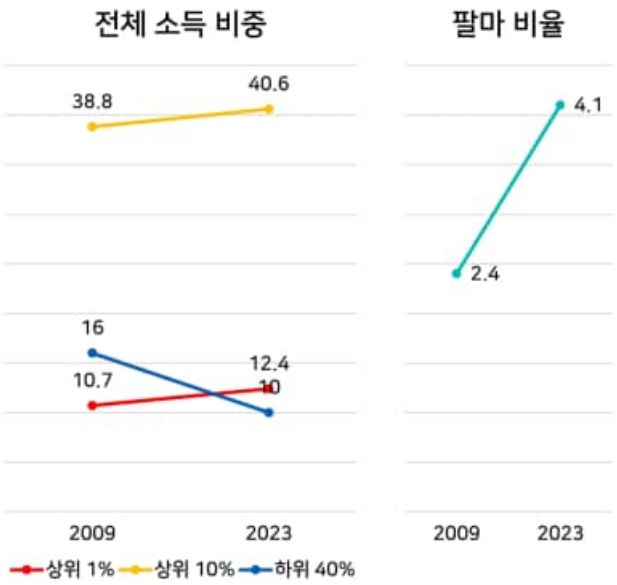
- **상대적 빈곤율**: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 (국제 통계 따름)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상대적 빈곤율	16.5%	16.1%	15.1%	14.8%	14.9%	14.9%	15.3%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	42.0%	41.4%	39.1%	37.6%	38.1%	38.2%	35.9%

-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 개인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12.4% 차지 (2023 가계금융복지조사)
  - 소득 최상위 0.1% 집단의 평균 소득은 약 14억 2,139만 원으로, (2023년, 국세통계자료로 계산)
    취업자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50% 집단의 평균 소득(858만원)의 165.7배
  - 순자산 상위 20% 가구가 전체 자산의 63.1% 차지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 다주택자 상위 20%가 대한민국 전체 주택 자산의 78% 소유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
    - 전체 출처: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대한한국 빈곤율과 불평등 현황

- **불평등의 심화**: 최상위 소득 집단의 소득은 꾸준하게 증가한 반면,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정체



- **팔마 비율**
  - 하위 40% 소득 대비
    상위 10% 소득 비율
  - 15년 사이
    상위 10%가 버는 돈이
    하위 40% 전체가 버는 돈의
    2배 수준에서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

- 상위 2~5분위는 모두 자산이 증가
- 자산 상위 5분위 가구의 자산 7.4% 증가
- 소득 하위 1분위 자산은 5.6% 감소
  -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 전체 출처: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대한민국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 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 가구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n% 이하일 경우 급여 지급
선정기준	1인 가구	4인 가구
생계급여 (32%)	820,556원	2,078,316원
의료급여 (40%)	1,025,695원	2,597,895원
주거급여 (48%)	1,230,834원	3,117,474원
교육급여 (50%)	1,282,119원	3,247,369원

    단위: 한국 원화(KRW)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기준 중위소득의 산정)** ① 기준 중위소득은「통계법」제2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규모별로 산정한다.
  - 소득 통계자료의 중위값을 기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 선정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설정의 문제

- 실제 통계자료와 기준중위소득은 괴리가 큼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값	소득분배지표 중위값
1인 가구	222.8만원	276만원	320.9만원
  -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분배지표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가금복	1인 가구	89.1	87.0	86.1	85.1	84.9	82.0	80.6
	4인 가구	94.4	92.3	91.3	89.1	87.7	83.6	81.3
소득분배지표	1인 가구	72.6	71.3	71.1	72.7	72.8	71.1	69.4
	4인 가구	98.2	96.3	96.0	96.9	95.8	92.4	89.3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진입해야 했으나 기준중위소득으로 인해 선정기준이 낮아져 진입하지 못한 비수급빈곤층 규모는 81.9만~113.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실제 부양여부/부양의사와 관계없이 수급권을 박탈**
  - 수급권자가 1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1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약 359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 수급권자가 4인 가구, 부양의무자가 1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약 516만 원의 소득이 있다면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 **적용 대상**
  - **생계급여**
    - 완화된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원(월 소득 1,084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 부양의무자가 고자산, 고소득자라 할지라도 부양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 잔존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 가장 심각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망한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의무자 중 한명이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
  - 단, 부양불능이나 부양기피 등을 보장기관이 확인한 경우 선정 가능 (입증의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

-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에서 탈락하는 이들이 발생함**
  - 2025년 기준 생계급여 기준(765,444원)이 의료급여 기준(956,805원)보다 엄격하지만 생계급여수급자는 175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150만 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가 더 많음 (=25만 명이생계급여를 받아야 하는 열악한 경제적 사정에도 의료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
  - 2021년~2022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은 2만 4157명이었고, 탈락자 월 평균 소득은 44만 3420원에 불과
  - 2017 유엔 사회권위원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 **재정 절감 압박 및 부정수급 프레임**
  - 대한민국 정부는 2017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 공언하였음
  - 그러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재정을 이유로 폐지되지 못 하고 있음
  - 실제 부정수급 사례는 대부분 공급자의 문제
  - 제도의 목적이 재정 절감과 부정수급 방지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수준 – 낮은 보장수준의 문제

- **실제 수급자들의 생활**
  - 2025년 20가구(1인 가구) 대상으로 2달 간 가계부 조사
  - 평균 수입은 10,83,947원 (생계급여+주거급여+경우에 따라 장애연금 등)
  -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8.7%~40.3%
  - 2달 간 육류 구입하지 못한 가구 8가구, 수산물 구입하지 못한 가구 10가구, 과일을 구입하지 못한 가구 5가구
  - 평균 식료품비 204,817원, 외식비 120,268원, 식비 합계 325,085원
  - 주거급여 제외 소득 대비 식비 비율 평균 35.0%
  - 대체로 소득의 절반 이상을 식비와 주거비에 지출 (=물가 영향↑)

- **생계급여 선정기준=보장수준이 낮게 유지되는 사이**
  하위 10% 저소득층 가구의 적자 규모는 2025년 1분기 124.3%로 크게 증가

대한민국은 이러한 제도 자체의 문제보다
복지대상자의 '발굴'을 중시하고 있음

발굴에 집착하나,
예산은 충분치 못하고,
당사자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정부

사각지대와 발굴 문제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빈곤층 사망 사건:** 2014 송파 세 모녀, 2022 수원 세 모녀, 2025 익산 모녀 등
- **복지의 사각지대는 발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선정 기준, 부족한 지원 내용 등 현 제도의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것
  - 정부는 26개 기관을 통해 47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그러나 2024년 발굴된 대상자 중 41.6%, 2025년 36.1%가 아무 지원을 받지 못함
  - 지원의 대부분도 (일회성) 민간 지원(2024년 69.6%, 2025년 66.0%)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경우는 2024년 5.8%, 2025년 6.7%
  - 현장 "발굴대상자 중 많은 수가 이미 '알고 있는 사각지대'"
    - 공유하고 싶은 사례: 강남구청은 2024년 하반기 강남구 반지하에 살던 세입자 50대 남성 A씨를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선정(6개월 무직, 월세와 전기요금 체납, 도시가스 중단)하고 자택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음. 11월 경 A씨는 동주민센터를 찾아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문의했으나 예산이 소진됐으니 1월에 방문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1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을 때는 5일 후 방문하라는 말을 들음. 그는 2025년 3월 20일 주검으로 발견됨.
- **빈곤층의 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낙인 효과, 부정수급 프레임 강화 등에 대한 우려

예산의 문제

- **재정 절감에 집중하는 정부**
  -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 2026. 3. 30. 기획예산처는 2027년도 예산에 대해 재량지출 15% 및 의무지출 10% 감축, 사업 10% 폐지 목표를 밝힘
- **긴급복지제도(재량지출)에 대한 영향**
  -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 단기간 지원을 제공하는 공공부조 제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 현재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매년 추경을 반복하거나,
    예산이 소진됐다며 신청조차 받지 않는 일들이 연말마다 벌어지고 있음
  - 예산이 소진되기 전이라도 일선 사회복지노동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지원을 심사하게 됨
    - 2024년 서울 25개 자치구 운영 현황 점검: 11월 초 4개의 자치구가 예산소진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있었고, 8개 자치구에서는 제한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었고, 13개 구에서는 '시행 중이나 곧 중단될 수 있다'고 답변
  - **전국 어디서나 같은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긴급한 필요가 거절당하지 않도록 의무지출로의 편성이 필요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예산 절감 압력을 중단해야 함

당사자의 의견을 받지 않는 불투명한 제도 운영의 문제

- **기준중위소득, 의료급여 정률제 등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은 모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됨**
  - 위원회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모든 기록이 비공개
  - 근래 공개하고 있는 회의록에는 회의 참석자 명단과 의결 결과만이 담겨 있어 어떤 근거로 정책이 결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음
  - 회의록과 속기록 의무 작성·보관·공개, 사전 회의자료 공표 및 회의 방청권 보장 필요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정부 관료나 전문가로 구성**
  - 복지 수급의 필요성을 피부로 체감하기 어려운 이들이 결정
  - 수급당사자 혹은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거나, 적어도 방청객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감사합니다

e-mail: sanha.kim@bkl.co.kr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

김산하 |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공익 분야에서만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홈리스, 취약주거 등 반빈곤 분야가 주된 활동 영역이며, 장애 이슈도 일부 함께합니다.

세션2

'생명의 보루' 소송으로 본 공공부조의 역할과 책임



좌장.

|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발표1. 생명의 보루 소송 투쟁의 경과, 원고·당사자의 조직화, 그리고 남은 과제

| 타가와 히데노부 (생명의 보루 소송 지원자)

발표2.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소감

| 모리 키누코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토론1. 생명의 보루 소송, 한국에서의 의의

|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토론2.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폐지 투쟁의 결과와 이행 상황

|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플로어 토론

발표1

생명의 보루 소송 투쟁의 경과, 원고·당사자의 조직화, 그리고 남은 과제

타가와 히데노부 | 생명의 보루 소송 지원자

【공적부조로서의 생활보호제도】

일본에서 공적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생활보호제도다. 일본 헌법은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생존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 이 헌법의 내용을 법률로 구체화한 것이 생활보호제도다. 이처럼 이념적으로는 훌륭한 생존권 보장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생활보호가 권리로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 오랫동안 과제가 되어 왔다.

【생활보호제도의 이용 실태】

일본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빈곤율이 높은 나라로, 국민의 약 15%가 상대적 빈곤 상태에 있다. 그런데 공적부조인 생활보호의 이용률은 약 1.6%에 불과하다. 그리고 포착률, 즉 생활보호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가운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은 많아야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생활보호 이용이 늘어나지 않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에서도 생활보호 이용이 비난의 대상이 되기 쉬워 제도 이용에 대한 기피감이 강하다는 점은 꼭 지적하고 싶다. 생활보호 이용이 권리가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생활보호 기준 인하의 경과】

2012년, 한 연예인의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국회에서 부정수급 문제로 거론되었고, 언론에서도 연일 크게 보도되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모에게 얼마를 송금할 것인지, 얼마만큼 부양할 것인지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이나 심판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다. 그런데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임에도 그 어머니가 생활보호를 이용한 것은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한 것은 큰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냉정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생활보호에 대한 비난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생활보호에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2012년 8월 공포된 「사회보장제도개혁추진법」은 부칙 제2조에서 "정부는 생활보호제도에 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조치 및 그 밖의 필요한 재검토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제1항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보호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엄격한 대처, 생활부조·의료부조 등의 급여 수준 적정화, 보호를 받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의 취업 촉진 및 그 밖의 필요한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명시하여 생활보호 기준 인하를 포함한 제도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당시 야당이었던 자민당은 2012년 말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생활보호 기준을 10% 인하한다"고 내걸었고,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에 복귀했다. 그리고 정권교체 후 가장 먼저 실행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2013년부터 3단계에 걸쳐 최대 10%, 평균 6.5%나 생활보호 기준을 인하하는 것이었다. 생활보호 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후생노동대신이 위촉한 「생활보호기준부회」에도 전혀 자문하지 않은 채, 생활보호기준부회의 논의가 끝난 뒤 "물가가 크게 하락했다"는 이유를 들어 생활보호 기준을 인하한 것이다.

【반격에 나선 생활보호 이용자】

평균 6.5%에 이르는 대폭적인 생활보호 기준 인하는 일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로 인해 생활보호 이용자들은 제대로 식사조차 할 수 없고, 목욕도 할 수 없으며, 오락비나 교제비 등의 지출도 할 수 없어 결국 고립된 채 살아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도저히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지원단체 등은 과거에 유례없는 생활보호 기준 인하에 대해서는 과거에 유례없는 반격을 하자고 호소하기 시작했다. 일본에서는 곧바로 기준 인하 처분을 재판으로 다툴 수 없고, 우선 간이한 방법인 「행정불복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1만 명이 넘는 생활보호 이용자들이 이 「행정불복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건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불복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000명이 넘는 생활보호 이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보루 소송」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각 지역의 지원을 연결하는 전국조직의 필요성】

전국 29개 지역에서 31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투쟁이 이어져 왔다. 지원단체의 활동이 전혀 없이 변호사만으로 싸워온 지역도 있었고, 각 지역의 지원체계는 제각각이었다. 또한 지원조직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 지역의 소송을 지원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다른 지역과 연계하거나 전국이 손을 맞잡는다는 의식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여론을 크게 바꿀 수 없다.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했다. 이 소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생활보호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고, 여론을 바꾸며, 각 지역 변호사의 활동을 연계해 더 큰 투쟁으로 만들고, 각 지역의 지원활동을 연결하여 전국적으로 지원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했다.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가】

각 지역에서 재판 심리가 시작되는 가운데 2015년 10월에는 생활보호 문제만을 주제로 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헌법 25조를 지키자 10.28 생활보호 액션 in 히비야」였다. 당사자와 지원자 등 4,000명이 도쿄 히비야 야외음악당에 모인 것은 매우 큰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다. 이 집회에서는 생활보호 기준이라는 '생명의 보루'를 지키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확인했다.

그 후 2016년 11월 7일 「생명의 보루 소송 전국액션」을 출범시켜 각 지역 지원단체들의 활동을 교류하고 전국적인 활동방침을 공유·관철해 왔다. 처음에는 대면으로 개최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점차 온라인 개최로 전환했다. 연간 몇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세 인식을 공유하고, 그에 기초해 당면한 활동방침을 구체화했다. 시기에 맞춰 집회, 거리 선전,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언론들이 잇따라 등장한 것은 우리 운동에 큰 힘이 되었다. 처음에는 비난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지 않았던 원고들이, 점차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도 밝히며 집회와 거리에서 당당하게 발언하는 모습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보며 큰 용기를 얻었다.

【최고재판소에서의 승리】

지방법원에서는 초기에 원고 측이 1승 8패로 좀처럼 이기지 못했다. 애초에 일본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비율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 속에서 지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꺾일 것 같았다. 그러나 점차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르기 시작했고, 지방법원에서는 20승 11패, 고등법원에서는 7승 5패가 된 시점에서 선행하던 두 지역의 소송이 최고재판소(대법원) 판결에 이르게 되었다. 지방법원 재판의 중반 이후에는 19승 3패로 원고 측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고재판소 판결을 맞게 된 것이다.

2025년 6월 27일, 최고재판소는 생활보호 기준 인하가 위법하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획기적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역사상 최고재판소가 생활보호 기준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한 판결은 처음이며, 과거의 기준 자체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후생노동성의 폭거】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져 기준 인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생노동성은 원고들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나머지 29건의 소송을 계속 다투고 있다. 그리고 기준 인하 전의 기존 기준과의 차액 전액을 보상하는 대신, 물가 하락이 아니라 "소비가 감소하고 있었다"는 별도의 이유를 새롭게 들고나와 2013년까지 소급해 생활보호 기준을 다시 인하하고, 보상액을 절반으로 깎는 폭거에 나섰다. 최고재판소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국가에 항의하고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각 지역에서는 추가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 행정불복심사청구가 시작되고 있다.

【남은 과제】

최고재판소에서 원고가 승소했다는 뉴스에는 비난성 댓글이 대량으로 달렸다. 최고재판소 판결 이후 각 지역 고등법원에서 이어진 승소 판결, 즉 원고 측의 18연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에게 생활보호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이 권리라는 의미가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다. 생활보호를 비난하는 풍조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최고재판소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정도의 생활보호 기준 인하가 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검증조차 전혀 하려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후생노동성의 태도는 "생활보호 이용자에게는 어떤 식으로 대응해도 용인된다"는 인식을 퍼뜨려 생활보호에 대한 비난을 더욱 조장할 위험이 있다.

현재의 생활보호 기준도 지나치게 낮다. 후생노동성은 자살 통계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 통계를 보면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는 86명, 2023년에는 118명, 2024년에는 131명, 2025년에는 150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생활보호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생활고를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국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보호 기준의 인상을 요구하며 인간의 존엄을 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참고 <비난 댓글의 예>

- “애초에 이런 소송을 낼 기운이 있다면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
- “납세자를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수급자는 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아닌가? 정말 곤궁하다면 받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
- “판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판결이 늘고 있는 것 같다. 사법부를 감사하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 “납세자를 우습게 보는 것도 정도가 있다.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는 알고 있는가? 애초에 생활보호를 너무 쉽게 승인하고 있다.”
- “납세자 쪽이 오히려 최저한도의 생활이 위태로워지고 있는데, 받기만 하고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으면서 일하는 사람보다 생활보호를 더 많이 받는 것이 비정상 아닌가.”
-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나. 현물지급만 해야 한다.”
- “판사가 직접 돈을 내면 되지 않나? 다수 국민의 혈세다.”
- “생활보호 수급자는 한곳에 모아 집단생활을 시키면 된다. 자유롭게 살지 못하도록 제한을 걸고 물품으로 지급하면 된다.”

2026 아시아 빈민대회

*생명의 보루 소송*의 역사
당사자 직접 조직하기

생명의 보루 소송 투쟁의 경과, 원고·당사자의 조직화, 그리고 남은 과제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사무국 차장

사회복지사
社会福祉士

타가와 히데노부
田川 英信

생명의 보루 소송
홈페이지

일본국헌법 제25조 제1항 (발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자유민주당의 선거공약
(2012년 12월)

생활보호 기준
10% 인하

2013년 7월 26일 **1만 건의 불복심사청구 운동 시작**



2015년 10월 28일 **도쿄 히비야 생활보호 행동**

"인간답게 살고 싶다" – 헌법 제25조를 지켜라



2016년 11월 7일 **생명의 보루 소송 전국액션 출범**



1만 건의 불복심사청구 운동을 거쳐



국책의 근간에 도전하는 투쟁 = 이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싸움



2020년 6월 25일 **나고야 지방법원: 첫 번째 판결**



청구 기각



2021년 2월 22일 **오사카 지방법원: 두 번째 판결**



기준 인하를 위법으로 판단



2023년 11월 30일

나고야 고등법원

원고들의 완벽한 승소



11

최고재판소(대법원)

선고일: 2025년 6월 27일





일본 정부는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후생노동성)

1. 원고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
2. 최고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
3. 지급해야 할 국가배상을 두고 흥정을 벌이고 있다.

⇒ 일본 전역에서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여전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2026년 5월 13일부터 새로운 불복심사청구 운동









2026년 7월 3~4일 **세 번째 원고 모임**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당사자, 활동가들과 함께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타가와 히데노부 田川英信 | 생명의 보루 소송 지원자

1954년생. 사회복지사. 도쿄도 세타가야구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활보호 업무 담당자(케이스워커), 생활보호 담당 계장을 지냈다. 현재는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사무국 차장, 생명의 보루 소송 전국액션 사무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실무 경험을 살려 생활보호를 진정한 권리로 만들기 위해 각종 상담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발표2

생명의 보루 소송의 원고로서 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

모리 키누코 |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7월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서 열린 전국 원고 교류 합숙에 참가해 주신 박용수님, 김윤영님, 이경희님, 감사했습니다. 한국의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른 가혹한 실태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직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여러분의 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보냅니다. 이번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60세에 정년퇴직하여 25년 간 연금을 받았지만, 지급액이 적어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68세 때 건강이 나빠져 생활보호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생활보호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남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다"는 수치심 때문에, 원고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내가 원고를 할 수 있을까?" "새로운 생존권 재판이란?" "생활보호 제도란?"

잘 알지 못한 채로, 저는 원고가 되었습니다.

70세를 넘긴 후, 원고가 되어 재판에서 싸운다는 목표가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서, "가능한 발언할 기회 같은 건 없는 편이 낫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법정의 의견진술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정말 좋은 의견이었다"며 주위 분들이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 큰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다른 원고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원고인 채로 있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동료들과 지지자, 변호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서도 “하고 싶은 말”, “전하고 싶은 마음”이 차례차례 솟아올랐습니다.

예전의 저는 “재판은 이기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만남과 대화를 거듭하며, “승패뿐 아니라 자신의 말로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을 통해 많은 훌륭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는 나인 채로 여기 있어도 좋다”고 당당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데에는, 법정으로 달려와 주신 지원자(편집자주: 원고들의 소송 과정을 지원한 활동가들을 지칭함)들의 존재도 정말 컸습니다. 방청을 위해 많은 지원자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지원단체분들이 당사자 이상으로 펼치는 운동과 활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해 주신다는 것에 그저 고개가 숙여지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생활보호 제도 말인데요, 왜 세상에서는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이용하는 사람은 빈곤이나 질병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 고령으로 연금이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된다면, 차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회는 의료비가 비싸고 보험료 부담도 커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회의 모습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우리가 온갖 욕설 섞인 비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곤란할 때 생활의 토대가 되고, 살고 죽는 문제에 없어서는 안 될 제도인데도,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되어 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곤란할 때, 국가의 제도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편견 없는 제도라는 것을 모두가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의 원고분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집회에 참가하면서, 많은 동료들의 노력을 실감해 왔습니다.

기준 인하는 처음부터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위법성이 인정되기까지 12년이나 걸려 대법원에서 승소를 맞이했으니, 판결대로 이행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보상은 절반이 되었고, 원고와 원고가 아닌 사람 사이에 차별을 만드는 국가의 방식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원고가 되어 만난 사람들과의 따뜻한 인연, 그것이 힘을 낼 수 있는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84세입니다. 함께 싸운 사람들과 보낸 시간에 경의와 감사가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힘낼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생명의 보루 소송의 원고로서 투쟁에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

모리 키누코

은퇴 후의 삶과 생활보호 사이에서 겪은 갈등

경제적 어려움
60세에 퇴직한 후 25년 동안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망설이다
68세에 건강이 악화되어 생활보호를 받기 시작했지만,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다", "부끄럽다"는 마음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고로서의 첫걸음
70세가 넘은 나이에 원고가 되었을 때, "나 같은 사람도 정말 원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도 목적 있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28일: 히비야 생활보호 액션

법정에서 나의 목소리를 찾고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괜찮다”고 깨닫다

법정에서의 진술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법정에서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자 주변에서 따뜻한 말을 건네주었고, 그것은 나에게 큰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다

동료 원고들과 지원자들의 열정을 통해, 승패를 넘어 내가 나 자신의 말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다

재판을 방청하러 온 지원자들과 동료 원고들을 만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나여도 이 자리에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되었고,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3





교토 원고들

법원에서



편견이 없는 사회,
누구나 의지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을 향해

차별과 편견에 질문을 던지다

생활보호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빈곤이나 질병, 낮은 연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을 차별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회 구조에 질문을 던지다

높은 의료비와 보험료로 부담이 커지고, 사람들이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사회의 어려운 상황 자체가 편견과 비판을 낳는 것은 아닐까요.

제도가 나아가야 할 모습

누구나 도움이 필요할 때 편견 없이 당연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1,000명의 동료 원고들과 함께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의 결의

12년간의 투쟁과 최고재판소에서의 승리

전국의 1,000명의 원고들과 함께 12년 동안 투쟁했고, 최고재판소에서 승소했습니다.

새로운 투쟁

정부가 배상금을 절반만 지급하거나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대하는 등 배상을 처리해 온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섰습니다.

감사와 앞으로의 길

이제 84세가 된 저는, 저와 연결된 사람들의 따뜻함에서 힘을 얻으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모두와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

모리 키누코 森絹子 | 생명의 보루 소송 원고

1942년 시가현 오쓰시 출생. 60대에 건강이 악화된 것을 계기로 생활보호를 신청했습니다.

2014년부터 일본의 생활보호 기준 인하에 맞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생명의 보루 소송」 가운데 교토 지역 소송인 「교토 신 · 생존권 소송」의 원고로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헌옷가게에서 찾은 옷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메이크해 입는 것을 즐기며, 수예를 비롯한 손작업도 좋아합니다. 또한 주변에서 찾은 들꽃과 앤티크 가구로 집 안을 꾸미며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안정노동
철폐하라

토론1

생명의 보루 소송, 한국에서의 의의

남찬섭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1. 들어가는 말

타가와 히데노부 사무국장님의 발제는 2013년 일본 정부가 단행한 사상 최대 규모의 생활보호 기준 인하에 맞서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투쟁의 기록입니다. 일본 헌법 제25조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상대빈곤율이 약 15%에 이르는데도 생활보호 이용률은 1.6%, 포착률은 기껏해야 2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급에 대한 비난과 낙인이 권리를 부끄러움으로 바꿔놓은 탓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생활보호기준 1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어 집권했고, 2013년부터 3단계에 걸쳐 평균 6.5%, 최대 10%, 연간 670억 엔에 달하는 기준 인하를 강행했습니다. 이때 일본 정부는 기준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전문가 기구인 생활보호기준부회에 자문조차 하지 않은 채 ‘물가 하락’을 이유로 독자적인 산식을 동원했습니다.

이에 맞서 1만 명이 넘는 수급 당사자가 행정불복심사청구를 제기했고, 1천 명이 넘는 당사자(1,025명)가 원고가 되어 전국 29개 지역에서 31건의 소송, 곧 ‘생명의 보루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초반 1승 8패의 열세를 뒤집어 지방재판소 20승 11패, 고등재판소 7승 5패의 전적을 쌓았고, 마침내 2025년 6월 27일 최고재판소는 기준 인하가 위법하다며 처분의 취소를 명했습니다. 최고재판소가 생활보호기준을 위법으로 판단하여 취소한 것은 일본 역사상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

나 발제자께서 전해주신 대로 일본 정부는 원고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소비 감소'라는 별개의 이유를 들고나와 기준을 소급하여 다시 인하하고 보상액을 절반으로 깎았으며, 이에 맞선 2라운드의 심사청구 운동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 생명의 보루 투쟁이 갖는 의미

이 소송이 다툰 것은 단지 몇 퍼센트의 급여액이 아니라,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결정해도 되는가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재판소는 기준의 결정이 "통계 등 객관적 수치와의 합리적 관련성과 전문적 식견과의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결여한 결정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랫동안 행정재량의 성역처럼 여겨져 온 빈곤선의 결정을 공적 검증과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법정의 논리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1만 건의 심사청구, 1천 명이 넘는 원고, 300명이 넘는 자원봉사 변호사와 20명이 넘는 전문가, 그리고 전국의 지원조직이 함께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보다 처음에는 비난이 두려워 얼굴을 가리고 이름을 숨기던 원고들이 실명으로 광장에 서서 발언하게 된 변화, 즉 낙인을 권리로 되돌리는 당사자의 조직화 과정 그 자체가 이 투쟁의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이면서도 '생활고'를 이유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22년 86명에서 2025년 150명으로 늘고 있다는 후생노동성 통계가 보여주듯 이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그렇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3. 한국이 직면한 유사한 문제: 기준중위소득의 자의적 결정

일본의 생활보호기준에 해당하는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 즉 행정적 빈곤선은 '기준중위소득(基準中位所得)'입니다[1].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선정 및 급여의 기준선으로 삼고 있고,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이 이를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른바 맞춤형 급여 개편과 함께 절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한 최저생계비를 대신하여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의 하나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채택함으로써 행정적 빈곤선의 상대적 수준이 전체 사회의 생활수준 변화에서 더는 뒤처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

1 한국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과 '중위소득' 사이를 띄워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공식 표기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정부가 발표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2026년에 적용되는 중위소득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누구도 2026년도 중위소득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2024년도 중위소득만 알뿐입니다. '기준'과 '중위소득'을 붙여쓴다면 이런 혼란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붙여씁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고 붙여쓰는 일이 한국 정부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요? 띄어쓰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차라리 '행정적 중위소득'이라고 솔직하게라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정부에 의해 사실상 자의적으로 결정되어 왔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은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그 구체적인 산정 내역과 근거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정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정부 측에 기울어진 구성인 데다, 회의 자료에는 '대외비' 도장을 찍어 회의가 끝나면 걷어가고, 민간위원에게는 보안각서를 요구하며, 회의 내용은 짤막한 요약회의록으로만 남깁니다. 그리고 법정시한 하루 전날 최종회의를 열어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기준으로 '죽고 사는' 시민들은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알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 기구의 검증 없이 독자적 산식으로 기준을 인하한 것이 위법이라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기준중위소득 결정은 그 합리성을 심사할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는 검증 불가능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생명의 보루 소송이 문제 삼은 것과 구조적으로 동일한, 어쩌면 더 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4. 그 결과: '상대적 빈곤선'이라는 이름과 어긋나는 현실

이러한 결정과정의 결과는 수치로 확인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처음 적용된 2015년에 그 상대적 수준은 실제 중위소득(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대비 76.1%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에는 66.4%까지 떨어졌고, 2024년에 약간 올랐지만 여전히 실제 중위소득 대비 6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매년 평균 1.01%p씩 하락해 온 것입니다. 2020년에는 산출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셋을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면서 실제 중위소득과의 격차가 12.49%(2018년 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시민사회는 3년에 걸친 격차 보정을 요구했고 재정당국은 10년을 주장했으며 최종적으로 6년(2021~2026년)에 걸친 보정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정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은 상승했거나 적어도 하락을 멈추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정 기간에도 상대적 수준의 하락은 계속되었습니다. 격차 보정은 사실상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입니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더 분명해집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명목으로는 연평균 4.61% 인상되었지만 실질로는 2.4~2.5% 인상에 그쳤고, 저소득층의 지출 비중이 높은 식품물가를 반영하면 연평균 1.08% 인상에 불과하여 사실상 정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격차보정을 하지 않았으면서 얼마 전 한국 정부는 당초 격차보정을 하기로 한 기간(201~2026년)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격차보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버렸습니다.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의 방식은 오히려 더 교묘합니다. 일본은 한 차례의 명시적 '인하'였기에 그것이 저항과 소송의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매년 반복되는 증가율 결정을 통해 상대적 수준을 조금씩 갉아먹는,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스텔스 인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인하라고 불리지 않기 때문에 다툼의 계기조차 형성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최저생계비 시절에도 주기적 계측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적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사실은, 문제의 근원이 계측방식이 아니라 예산제약논리가

지배해 온 결정과정 그 자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모든 회의의 녹취록 작성·공개, 회의자료의 대외비 분류 기준과 기한의 명확화, 결정예고제의 도입 등 결정과정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하락한 기준중위소득의 상대적 수준을 복원하기 위한 적정화 로드맵이 수립·시행되어야 합니다.

5. 맺으며: 공감과 연대

생명의 보루 소송이 확인해 준 것은, 최저생활보장의 기준은 재정당국의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의 문제이며, 그 결정은 객관적 통계와 전문적 식견, 그리고 공개적 검증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리와 함께, 그것을 만들어낸 1만 건의 심사청구와 1,025명의 원고, 수백 명의 변호사와 전문가, 전국의 지원조직이라는 운동의 경험은, 밀실에서 결정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싸우고 있는 한국의 당사자와 활동가들에게 중요한 함의를 던져줍니다.

수급자를 향한 비난과 낙인은 두 나라가 공유하는 공통의 적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힘 역시 국경을 넘는 연대에서 나올 것입니다. 일본 최초의 생활보호 재판인 아사히 소송의 원고 아사히 시게루 씨는 "권리는 싸우는 자의 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보루 소송의 투쟁과 승리는 한국의 반빈곤운동에도 중요한 공감과 연대의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원고 여러분과 지원자 여러분의 오랜 투쟁에 깊은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

남찬섭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10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제5차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 위원,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쟁
조아

토론2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 폐지 투쟁의 결과와 이행 상황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1842일의 광화문 농성 투쟁

이형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농성의 배경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부양의무자기준은 한국사회의 마지막 안전망이라고도 불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 중 하나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가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권리로서 보장해야 하는 공공부조이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 이하이더라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된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실제 부양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갖고 있는 거대한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으로 오랜기간 지목되어왔다. 2012년 6월, 거제에 살던 이씨 할머니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한 뒤 시청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법도 사람이 만드는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는 유서를 남겼다. 이 죽음에 분노한 쪽방 주민들은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을 제출했다. 또 이 죽음은 장애인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수급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부양의무자기준이 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의학적 기준에 따라서 1~6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였다. 장애등급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내용과 시간이 달라졌다. 2000년대 이전에는 장애인 복지제도가 상대적으로 덜 갖추어져 있었기에, 장애등급의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활동지원제도, 장애인연금 등 장애인 복지제도가 하나 둘 도입 되면서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2007년 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되고, 2009년 정부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던 이들을 전수조사하면서 탈락자가 대거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에 맞춰 사람들을 선별하는 데 장애등급제를 이용한 것이었다.

당시 한국은 복지제도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한 복지제도에서 밀어내고 있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없애기 위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거제에 살던 이씨 할머니와 같이 가난과 장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이들이 계속 발생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등 장애운동과 빈민운동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2012년 8월 21일 광화문 역사 지하도에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의 성과

공론화, 사회적 인식의 변화

농성을 시작할 당시 다수의 사람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특히나 한국은 가족중심 이데올로기가 강한 국가이기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자는 주장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았다. 사회복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는 어렵고 무모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100년이 걸릴 거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럼에도 1,842일 하루도 빠짐없이 농성장을 지키며 서명을 받고, 거리에서 투쟁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이 왜 폐지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냈다. 광화문 광장에 사람들이 모이면 유인물을 들고 나갔고, 전국을 순회하며 농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 결과 점차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요구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농성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다. 농성이 종료될 시점에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반박 불가능한 주장이 되었다. 농성 초반에 무리한 요구라고 이야기 했던 사회복지 관계자와 전문가들도 지금은 입을 모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정책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성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변화였다.

내부 조직화와 연대의 확장

농성장은 1,842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주간과 야간 사수가 상주하여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진행하며 서명을 받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가입되어 있는 전국의 회원단체에서는 농성이 장기화됨에 따른 우려가 있었다. 각 단체와 지역에서 진행하는 자체적인 사업이 있어, 농성장을 종일 사수하고 거리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점차 책임감으로 변화되었다. 각 회원단체의 회원들이 농성장 사수와 투쟁에 참여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당사자가 요구하며 투쟁해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또 농성장에는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초생활 수급당사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쪽지와 함께 음료수를 두고 가기도 하며,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염원하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모였다.

한편 광화문 농성을 할 당시가 가장 많은 연대를 했던 기간으로 기억한다. 농성장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외에도 철거민, 노점상, 노동자, 성소수자 등 다양한 사안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모이는 공간이었다. 쉴 틈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온갖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이들을 농성장으로 초대했다.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확인하고 공통점을 찾으며 연대할 것을 결의하는 나날들이 계속됐다. 그들이 개최하는 기자회견이나 집회에 참석하고, 농성장을 차렸다는 소식이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찾아갔다. 그러다보니 매년 농성을 시작한 8월 21일에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때마다 참가자 수가 늘어났다. 농성을 마무리할 당시에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참가단체 수가 228개에 달했다.

농성이 만들어낸 변화의 물꼬

1,842일 농성을 하는 동안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2012년 12월 있었던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시 당선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민명령 1호로 공약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공약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공약하지 않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탄핵된 이후 치뤄진 19대 조기 대선에서, 당선이 유력한 후보 모두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19대 대통령에는 문재인이 당선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첫 복지부 장관이었던 박능후 장관이 2017년 8월 25일 광화문 농성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는 농성장에 모셔진 영정에 조문을 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모두 단계적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던 순간,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농성장에 방문해서 다시 한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하던 순간, 농성에 함께 했던 많은 이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복합적인 감정이었다. 농성을 마무리할 때 농성장에는 18개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다. 모두 가난과 장애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난 동료들이었다. 농성장에 모셔진 영정 외에도 수많은 이들이 1,842일의 농성기간 동안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세상을 떠났다. 그럼에도 농성의 승리로 이뤄낸 성과를 통해 앞으로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농성 이후 남아있는 과제

강산이 변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

2018년 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있다. 2021년 10월 정부는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기존에 부양의무자에게 적용하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각 연 1.3억 이하, 12억 이하이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만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경우 지자체에서 가족관계 해체에 대한 심의를 반드시 실행하라는 내용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서에 담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는 지자체의 재량권한인데, 지자체는 위험 부담이 큰 재량을 작동하기 어려워 한다. 기준 자체를 폐지하지 않았기에 수급자와 사회복지 담당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 피해는 정보도 부족하고 결정권한도 없는 수급자가 모두 받게 되는 구조다. 한편, 의료급여에는 생계급여에 적용되는 완화된 부양의무자기준조차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약속으로부터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감에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는 것이다.

2018년 10월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 폐지된 주거급여의 경우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 2026년 7월 기준 약 278만 명에 달하며 이는 인구의 5.7%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지 않고 완화된 생계급여의 경우 약 195만 명으로 인구의 3.7%이다. 완화된 부양의무자기준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약 160만 명으로 인구의 3.1%에 불과하다. 한국의 빈곤율이 14~15%라는 점에서 여전히 거대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물론 부양의무자기준은 완전히 폐지가 될 것이다. 올해 이재명 정부에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수급신청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인구 유형별로 기간을 두고 완화하고 폐지

하겠다는 계획은 가난한 사람들 간의 갈등을 만들고,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가 너무 느리다. 지금 이 발표문을 작성하는 기간에도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급여가 중지되었다는 동료의 소식을 접했다. 가난을 경험하며 당장 내일의 생사를 다투고 있는 이들에게 너무 가혹한 속도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약속이 미뤄지는 매시간동안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과 삶이 무너지고 있다.

가짜 폐지된 장애등급제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부터 폐지가 되었다. 당시 정부는 일상생활지원, 이동, 고용과 소득 순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던 이유는 정부가 장애인복지제도를 한정된 예산에 맞춰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장애인이 각자의 특성과 환경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소득과 관련된 장애인연금의 경우 여전히 이전 장애등급을 적용해 중복 3급까지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고 했는데 장애인연금에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활동지원제도에는 이전 장애등급 대신에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가 도입되었다. 이는 활동지원제도가 필요한 장애인이 조사를 통해 15구간별로 나뉘어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차등화해 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활동지원제도의 대상은 소폭 늘어났지만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매한가지다. 특히 24시간 활동지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예산을 늘리지 않고 겉 포장지만 바꾸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내년이면 정부와의 약속 10년이 된다. 그럼에도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여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정부가 약속한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왔다. 매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요구하며 전동 행진을 진행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 전반과 제도 개선을 결정하는 회의장 앞에 매년 찾아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외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장애와 가난이 두려워 죽음을 선택하는 사회를 중단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의 순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이형숙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장애와 기초생활수급 당사자로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진행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역할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상임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광화문 농성이 종료된 이후 남은 과제 해결과 장애해방, 빈곤철폐의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는 장애인권리운동가입니다.

세션3

아시아 현장의 목소리
– 투쟁은 나의 힘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패널1. 안젤리나 선 (홈리스 경험 당사자)

패널2. 아이비 (씨오엠 주민조직가)

패널3. 오중찰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패널4. 박종만 (양동주민회 위원장)

패널5. 조상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활동가)

패널6. 김나영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협실장)

패널7. 주장욱 (홈리스행동 활동가)

좌담

플로어 토론

패널1

홍콩 홈리스 여성의 생존기

안젤리나 선 | 홈리스 경험 당사자

2020년 이전까지 저는 두 차례 홈리스 상태를 경험했고, 홍콩의 거리에서 배회하며 여러 해 동안 생활했습니다.

제가 홈리스가 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

직업 경력의 실패: 저는 첫 직장이었던 홍콩 정부 사법부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 부문으로 옮겼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성공적인 경력을 쌓는 데 실패하면서 극심한 좌절감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겨운 '돌봄제공자(Carer)' 역할을 맡게 된 것: 그 후 4년 동안 저는 일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며 중병을 앓고 있던 부모님 두 분을 돌보았습니다. 부모님이 각각 폐암과 운동신경원질환(Motor Neurone Disease)으로 연이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회적 관계를 끊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큰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정타는 2013년에 찾아왔습니다. 7년 동안 함께 살며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정서적 스트레스 속에서 저는 자기연민에 빠지고 혼자 있고 싶어 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현실조차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홈리스 생활의 시작

저축한 돈을 모두 써버린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살던 임대주택에서 나와야 했고, 밤에 잠을 잘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맥도날드, 공원, 지하주차장 계단, 보행자 통로, 지하철, 정부가 폭염이나 한파 때 운영하는 임시쉼터 등이 제가 잠을 청했던 곳들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존엄성 없이 살아가며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

- 차별과 편견, 악의, 심지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낯선 사람들에게 괴롭힘과 위협, 모욕을 당하는 일.
- 낯선 사람이나 돈을 받고 폭력을 행사하는 삼합회 조직폭력배들에게 실제로 폭행을 당하는 일.
- 홈리스의 소지품을 무료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지품을 도난당하거나 불법적으로 폐기당하는 일.
- 범죄조직이 홈리스에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거나 각종 이익을 제공하겠다며 마약 운반, 자금세탁, 위장결혼 등의 범죄활동에 가담하도록 유혹하는 일.
- 낯선 사람들이 홈리스 여성을 성매매 여성으로 여기거나, 홈리스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법적 책임 없이 성추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간주하면서 발생하는 성희롱과 성폭력.
-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는 문제. 특히 충분히 쉴 수 없는 홈리스들은 자선단체와 NGO가 제공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 위해 매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발과 종아리가 점차 심하게 붓고 통증이 생기며 이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체질환으로 인해 불안, 강박행동장애, 우울증 등의 기분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 매일 씻기 어려운 문제. 홈리스가 샤워할 수 있는 곳은 일부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샤워실 정도에 불과하며, 이용시간도 오후 4시부터 8시 30분까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만으로는 주변의 청소노동자와 건설현장 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폭염·한파 임시쉼터의 부족한 점

홍콩 정부는 18개 구에서 홈리스와 야간 숙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폭염 및 한파 임시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면시간과 시설 모두 매우 부족하며 개선이 필요합니다.

- 전화 문의 핫라인 외에도, 쉼터가 문을 여는지 여부를 필요한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 이용자들이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현재의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가 아니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쉼터를 운영해야 합니다.

- 온수 샤워시설, 홈리스의 휴대전화와 장애인의 전동휠체어를 충전할 수 있는 전기시설, 그리고 소지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 여성 홈리스에게 더 넓은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쉼터에서는 여성들을 대개 홀 한쪽의 작은 공간에 팔 길이도 되지 않을 만큼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자도록 배치하는 반면, 남성들은 나머지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코의 도움으로 여성쉼터에 입소하다

2015년 무렵, 거리의 믿기 어려울 만큼 가혹한 생활환경 속에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도로 지쳐 있던 저는 과거 홈리스였던 한 사람의 소개로 소코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 알려진 자선단체의 경험 많은 담당자인 응와이퉁과 전문 사회복지사들로 구성된 그의 팀은 신속하게 제가 여성쉼터에 입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식품 포장 일자리를 구했고, 이후 소코의 도움을 받아 생활시설이 더 좋은 다른 쉼터로 옮겼습니다. 7개월 뒤에는 민간주택에서 방을 빌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홍콩 홈리스 쉼터·숙소의 현대화

2026년 3월 18일, 홈리스 문제와 관련해 입법회 의원 19명이 제기한 질문에 답하면서 노동복지국장은 홍콩 사회복지서가 이미 홈리스에게 숙박공간과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최소 6곳의 쉼터 또는 숙소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자선단체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가 두 곳의 여성쉼터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 쉼터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치와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가 주장하는 등록 홈리스 700여 명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는 1,000명 이상의 홈리스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쉼터를 더 설치하고 수용능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 입소자가 일자리를 구하고 퇴소 후 민간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충분히 모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재 6개월인 단기 거주기간을 최소 2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 기존의 이층침대식 공동수면실을 대신해 1인용 칸막이 공간을 제공하여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입소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의료상담과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코에 도움을 요청하다

2020년 저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당시 하고 있던 사무실 청소 일을 그만두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저축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복한 직후 다시 거의 2주 동안 홈리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널리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쉼터가 신규 입소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소코의 도움으로 정부 지원 과도기주택(過渡性房屋, Transitional Housing, 편집자 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 등 긴급한 주거 필요가 있는 가구에 제공하는 단기 주거) 사업을 통해 게스트하우스의 월세 숙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복지서로부터 종합사회보장원조(CSS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Assistance, 편집자 주: 홍콩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주거비 등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공공의료비 면제 등과 연계하는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생활비와 임대료에 대한 월별 수당과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홍콩 주택국이 최근 도입한 간이 공공주택(Light Public Housing, 簡約公屋, 편집자 주: 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장기간 기다리는 저소득 가구에게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주택. 정부가 모듈러 방식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 사업의 월세 원룸형 주택으로 이주했습니다.

빈곤과 홈리스 문제에 맞서는 자원활동가로서의 새로운 삶

고혈압과 류마티스관절염 때문에 현재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응와이퉁과 그의 동료들의 격려를 받아, 저는 빈곤과 홈리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코가 진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활동가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고위 정부관료와 입법회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실효성 있고 종합적인 '홈리스 친화 정책(無家者友善政策, Homeless Friendly Policy)'의 시행을 요구합니다.
- 2026년 7월 홍콩 정밀빈곤지원위원회(Hong Kong Commission on Targeted Poverty Alleviation)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언급한 새로운 '가치 전환(transferred values)' 개념에 따라 실제로 지원받을 가치가 있는 홈리스들을 위해 더 많은 공공주택, 의료서비스,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 정부가 홈리스 아웃리치팀에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설득합니다.
- 홈리스와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사람, 출소자 등을 포함한 주변화된 집단을 위한 커뮤니티 리빙룸(社區客廳, Community Living Room, 편집자 주: 저소득가구에게 공용 주방·세탁·학습·휴식 공간과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현재는 분할주택 주민만 대상임)의 조성을 요구합니다.
- 여러 활동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자선단체들로 구성된 홈리스 연대체와 함께 거리행동에 참여하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홈리스 친화의 날을 알리고 확산합니다.

결론적으로, 빈곤과 홈리스 문제에 맞서는 반빈곤운동에는 새로운 전략과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이 운동은 특히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세대를 이어 계속될 끝없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안젤리나 선 Sun So Han Angelina 孫素嫻 | 홈리스 경험 당사자

안젤리나 선은 홍콩이공대학교(Hong Kong Polytechnic)를 졸업했으며, 번역 · 통역, 언어학, 매스미디어를 전공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법부(Judiciary Department)에서 근무했으며, 금융 · 투자, 법률, 관광 · 여행 등 다양한 민간 부문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안젤리나 선은 두 차례 홈리스를 경험한 뒤, 소코의 지원을 받아 현재 간이공공주택(Light Public Housing)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소코의 자원활동가로 참여하여, 홍콩의 홈리스 당사자들의 복지와 권리를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시간을 들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패널2

메트로 마닐라에서 필리핀 도시빈민 투쟁의 전통을 이어가다: 도시를 향한 목소리와 권리를 위해

아이비 | 씨오엠 주민조직가

메트로 마닐라에서 필리핀 도시빈민 투쟁의 전통을 이어가다: 도시를 향한 목소리와 권리를 위해



APAP 컨퍼런스 발표
2026. 10. 16.
아이비
씨오엠(COM)과 유피에이씨(UPAC)

유피에이씨(UPAC, Urban Poor Action Committee)란?

두 개의 NGO인 씨오엠(COM, Community Organizers Multiversity)와 유피에이(UPA, Urban Poor Associates)가 공동체 조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조직화된 주민조직 72개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 리살, 불라칸에서 211,277가구를 대표하며, 토지 점유의 안정성과 기본 사회서비스의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시빈민의 상황

도시의 비공식 정착민들은 수십 년간 투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효과적인 공동체 조직화를 통해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했습니다.

- 토지 점유의 불안정성
- 강제퇴거 위협
- 열악한 주거환경
-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 낮은 사회적 지위와 차별
- 기후변화에 취약: 극심한 홍수, 폭염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성과

- 단순한 문제부터 복잡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동체의 다양한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조직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 소유권 증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도시빈민 공동체가 식수와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강제퇴거에 맞서 저항했습니다.
- 부담 가능한 가격의 이주지를 확보했습니다.
- 민주적 리더십, 기술, 지식과 역량을 배우고, 문제와 해결책을 스스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 피플스 플랜(People's Plans)을 만들었습니다: 원거주지 유지(Onsite), 도심 내 재정착(In City), 도심 인근 재정착(Near City)
- 여성의 리더십을 발전시켰습니다.



공동체 조직화를 통한 성과



망가한 방수로에서 진행 중인 토지 배분
(파시그, 카인타, 타이타이 제방)
50,000가구



참여적 거버넌스와 법·제도

- 1986년 피플 파워 혁명 이후 열린 정부 환경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 주요 법률의 제정을 위해 로비 활동을 벌였습니다.
  - 1992년 도시개발 및 주택법 (2016년 개정)
  - 1997년 '스쾃(무단 점거, squatting)'를 범죄화한 법률 폐지
  - 2019년 필리핀 정부에 주거도시개발부 설립
  - 2019년 빈민 마그나카르타법
  - 유피에이(UPA)와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베니그노 아키노 3세 사이에 협약 체결(2010년)
  - 피플스 플래닝 과정이 지방과 국가 차원 모두에서 인정받음



상원, 하원 및 주거도시개발부의 주택 실무협의체(워킹그룹)에 유피에이씨(UPAC) 참여

빈곤철폐·점유권·경제정의를 연결하기



- **도시를 누릴 권리:** 도시빈민의 투쟁은 단순히 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시민권과 포용을 위해 싸우며, 주변화된 공동체가 경제적 주변부로 밀려나는 대신 도시 공간의 형성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 **빈곤에 맞서는 토지 점유의 안정성:** 안정적인 토지와 주거를 확보하는 것은 빈곤에 맞서는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이는 공동체 조직화, 커뮤니티 모기지 프로그램, 피플스 플랜 등을 통해 실현되며, 갑작스러운 강제퇴거로 발생하는 비용으로부터 가구를 보호하고 가계 지출을 안정시킵니다.
- **힘을 위한 도구로서의 공동체 조직화:** 집단행동은 취약한 주민들을 전략적 행위자로 변화시켜, 기본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노동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협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 필요에서 지속가능한 생계와 공동체로

- **비공식 노동의 함정 피하기:** 도시와 가까운 곳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면 도시빈민 가구가 경제 중심지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거리 이주지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실업과 소득 충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경제의 발전:** 현지에서 기본적인 사회서비스(물, 전기, 안전한 주거)가 마련되면, 공동체는 매일의 생존에만 매달리는 상태에서 벗어나 소규모 사업, 저축협동조합, 영세기업에 투자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집단적 회복력:** 역량을 갖춘 주민조직은 지역의 자원을 공동으로 모으고, 지역 기반 경제 프로젝트를 만들며, 단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경제위기로부터 가구를 보호할 수 있는 완충 장치를 마련합니다.



경제정의의 진전

- **빈민에게 불리한 정책에 맞서기:** 진정한 빈곤철폐 활동은 하향식 인프라 사업이나 상업화된 도시개발(감당할 수 없는 주택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공동체가 파괴될 위험에 맞서 싸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 **도시 거버넌스에 포함되기:** 경제정의란 도시빈민과 비공식 노동자들이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 토지 이용, 지역 경제계획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책·제도의 개혁:** 지역 공동체의 생존을 넘어 구조적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공평한 주택금융, 빈민 친화적인 주택 관련 법·제도, 적정한 임금 등의 개혁을 통해 도시빈민의 장기적인 경제적 해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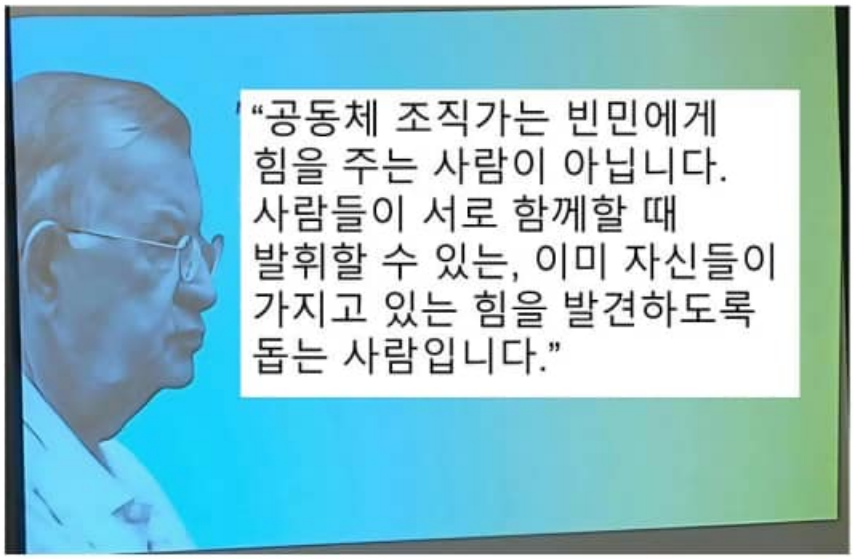
국회 하원 위원회 청문회
주제: 방수로 제방 건설로 인한
메트로 마닐라 빈민 조직에 대한 강제퇴거 통보

주요 고민

주택 프로그램은 토지 점유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공동체별로 엄격하게 조직하는 방식은 더 넓은 도시빈민운동 차원에서 연대와 집단행동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공동체 조직들이 자신들의 주거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지역의 도시빈민 공동체들 사이에서 연대와 하나의 통합된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배운 것



감사합니다

THANK YOU

SALAMAT PO

출처:

1. Three steps forward, two steps back: a people's-eye view of participatory governance by Dr. Mary Racelis

2.Organizing People for Power by Dr. Ana Marie Karaos

아이비 Ivyrose O. Igup
씨오엠(COM, Community Organizers Multiversity)
ivyroseigup10@gmail.com
+639632742690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아이비 Ivyrose Ortega Igup | 씨오엠 주민조직가

아이비는 사회복지학 학사 학위를 보유한 등록 사회복지사로,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활동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과거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DSWD)에서 근무하며 빈곤층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업무를 담당했고, 필리핀 제6지역에서 DSWD KALAHI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담당자로도 활동했습니다.

현재는 씨오엠(COM, Community Organizers Multiversity)에서 메트로 마닐라와 루손의 여러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빈민 조직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민조직가, 사회복지 현장실습생, 지역 주민조직가(Local Community Organizers, LCO)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수도권(NCR) 팀장도 맡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와 주거권을 위해 씨오엠의 협력단체들과 함께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권리옹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성권리, 아동권리, 재난위험경감(DRR), 기후변화 적응(CCA), 생계 등의 의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코로나19 대응과 태풍 카리나 피해 대응 등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행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아이비는 오랜 주민조직화 경험을 바탕으로 APOAMF의 도시 내 저층주택(LRB) 재정착 운동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민조직(PO)이 주도하는 저층주택 사업의 정부 예산 확보뿐 아니라, 주민이 직접 관리하는 LRB 단지 운영을 위한 제도와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또한 씨오엠으로부터 로코아(LOCOA, Leaders and Organizers of Community Organization in Asia) 공동 코디네이터로 임명되었으며, 국제적인 여성운동 네트워크인 화이러우 커미션(Huairou Commission)과 관련해 국제 포럼과 컨퍼런스, 프로젝트 실행, 필리핀 내 협력 주민조직 및 비정부기구(NGO)와의 네트워킹 업무도 담당해 왔습니다.

패널3

서울역 옆, 동자동 쪽방촌 우리는 여기에 삽니다 -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 이야기

오중찰 |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동자동은 어떤 곳인가
What Dongja-dong is

서울역에서 걸어서 5분,
빌딩숲에 가려 보이지 않는 동네

Five minutes on foot from Seoul Station —
and hidden behind the office towers

약 800명

전국에서 가장 큰 쪽방촌
About 800 residents — Korea's largest jjokbang district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일용직 노동자가 대부분입니다.
Mostly older people living alone, disabled people and day labourers.

1년에 30명 안팎이 이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About 30 residents die here every year.



빌딩 바로 뒤가 쪽방촌입니다
The towers stand directly behind us



쪽방 골목에서 올려다본 하늘
Looking up from a jjokbang alley

동자동사랑방 · 오중철 Sarangbang of Dongja Community · Oh Jung-chel 2 / 8

하나 · 입는 것
One · What we wear

바퀴벌레와의 전쟁은
차라리 양반이었습니다

The war with the cockroaches
was the easy part.

그러나 빈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옷깃 뒤 봉제선 틈에 숨어
있다가, 지쳐 잠든 사람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Bedbugs were another matter. They hide in the seams behind a collar and feed on you while you sleep.

서너 달을 밤마다 물렸습니다.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
피가 나도록 긁다 보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For three or four months I was bitten every night, and scratched myself bloody.

팥뚝의 흉터가 부끄럽고, 혹시 남에게 옮길까 두려워
사람 모이는 자리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I am ashamed of the scars, and afraid of passing a bedbug to someone else.



벽지와 도배지 틈, 빈대가 숨는 자리
The wallpaper seams where bedbugs hide

동자동사랑방 · 오중철 Sarangbang of Dongja Community · Oh Jung-chel 3 / 8

둘 · 먹는 것
Two · What we eat

한 끼면 행복하고,
두 끼면 금상첨화입니다

One meal a day is happiness.
Two is a bonus.

하루 한 끼 먹으면 감지덕지입니다.
서울시 동행식당 카드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One meal a day is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I use the city's Donghaeng Restaurant meal card.

사장님이 넉넉히 담아주시면
그것을 두 끼, 세 끼로 나누어 먹습니다.

When the owner fills the plate generously,
I stretch it over two or three meals.

우리는 게을러서 쪽방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부지런함만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We did not end up in a jjokbang because we were lazy.
No amount of diligence can overcome the structure we live in.



사랑방 식도락, 함께 나누는 한 끼
Sikdorak — a meal shared at Sarangbang

셋 · 사는 곳
Three · Where we sleep

1평이라도 감지덕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주거권은 다른 문제입니다

Even one pyeong felt like a blessing — but that is not a right to housing.

1평 남짓한 방. 비바람과 눈보라를 피하는 내 방입니다.

A room of about 3.3 m² — but it is mine, out of the rain and snow.

밤마다 사우나를 전전하고 지하철에서 충전하던 시절에 비하면,
하늘을 지붕 삼던 삶에 비하면 상전벽해입니다.

Compared with nights moving between saunas, charging my phone in the subway — when the sky was my roof — this is a world transformed.

1평 방에서 휴대폰을 충전하며 감격해야 하는 현실이,
이 사회가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줍니다.

That I feel moved simply because I can charge a phone in one pyeong shows how this society treats its poorest people.



쪽방 문 앞, 이웃의 안부를 확인하는 자리
At a jjokbang door, checking on a neighbour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So we decided not to be alone

혼자 쓰는 '쪽방' 말고, 함께 모이는 '사랑방'

Not a jjokbang you keep to yourself,
but a sarangbang — a room where we gather

2011년 3월 19일
19 March 2011

돈이 없어 장례도 못 치르고, 아파도 빌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사랑방마을 주민협동회를 만들었습니다.

We could not afford funerals, and no one would lend to us when ill.
So the residents founded our own mutual-aid cooperative.

동자동사랑방 · 오중철 Sarangbang of Dongja Community · Oh Jung-chel 6 / 8

사랑방은 무엇을 하는가
What Sarangbang does

함께 먹고, 함께 치우고, 함께 보냅니다

We eat together, clean together, and bury our dead together



식도락 · 밥 나눔
Shared meals



추석 마을행사
Neighbourhood festivals



마을청소 100회
100th neighbourhood clean-up



마을장례 · 무연고 공영장례
Funerals for those with no family

284명
협동회 조합원
cooperative members

5억 1천만 원
주민들이 모은 출자금
= US$370,000 saved by residents

14억 원
5,700건의 주민 대출
= US$1.0M lent, in 5,700 loans

연 2%
대출 이자율
annual interest rate

2026년 2월 기준 · 임원은 협동회를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 As of Feb 2026 · none of the officers take any pay | US$1 = 1,388원

동자동사랑방 · 오중철 Sarangbang of Dongja Community · Oh Jung-chel 7 / 8



세상을 떠난 이웃들의 영정을 들고 행진하는 주민들 Residents marching with portraits of the neighbours who died

벌어놓은 약속 앞에서
On a promise that was made and broken

못 지킬 약속이라면
철회하든지, 날짜를 못 박으십시오

If you cannot keep the promise, withdraw it — or name the date.

동자동사랑방 · 오종철 Sarangbang of Dongja Community · Oh Jung-chul

2021.2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약속한 때
The government's promise

180명 그 뒤 동자동에서 세상을 떠난 이웃
neighbours have died in Dongja-dong since

64.6% 다른 동네에 사는 건물 소유주 비율
of building owners live elsewhere

5년이 넘도록 지구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Five years on, the district has not even been designated.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오중찰 | 동자동사랑방 주민활동가

오중찰님은 동자동 쪽방촌에 살며 동자동사랑방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자동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쪽방에서의 삶과 주민공동체의 경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패널4

박종만 | 양동주민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양동주민회 위원장 박종만입니다.

저희 양동주민회가 창립한 지 6년 여의 시간이 흘렀네요. 저희는 원래 '양동쪽방촌주민회'였습니다. 서울역 인근에 위치한 양동에는 쪽방촌이 있었습니다. 쪽방은 3.3㎡ 내외의 작은 방으로, 방 내부엔 누울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뿐이고, 부엌과 화장실은 수십 명이 공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양동쪽방촌에 대해 민간재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쫓겨날 위기에서 주민들은 '양동쪽방주민회'를 만들고 함께 힘을 합쳐 대응했습니다. 홈리스행동과 빈곤사회연대 등 여러 단체의 도움으로 발기된 주민조직은 철거업체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힘을 합쳐 대항했습니다.

그 결과, 해든센터라는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긴 시간을 함께해준 모든 회원들과 단체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해든센터에 입주하고도 동자동 공공개발 실천 등 사회활동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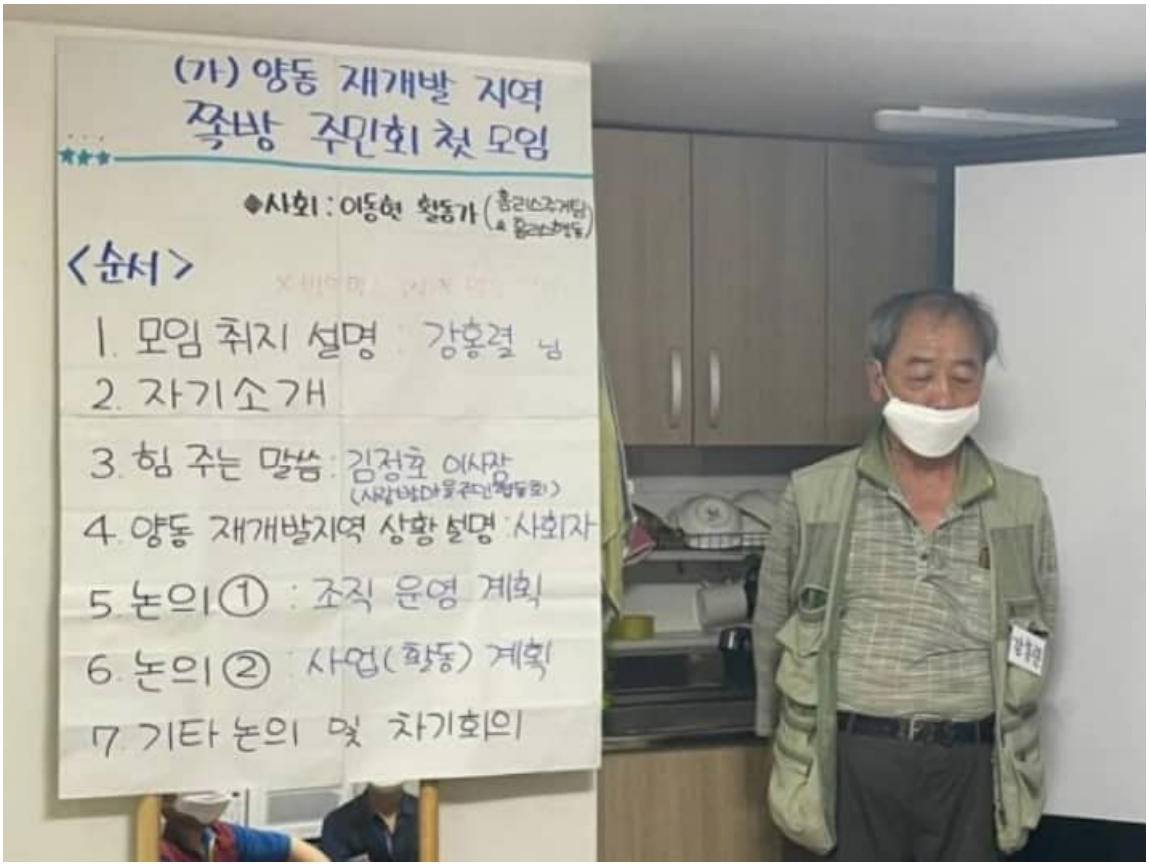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



<사진 1: 양동쪽방촌 골목에 서 있는 박종만 위원장>



<사진 2: 2019년, 쫓겨나는 사람들의 세 번째 수요일 문화제>



<사진 3: 2021년 6월 10일, 양동쪽방주민회 첫 모임에서 모임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故강홍렬>



<사진 4: 2021년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 대상 주민회 피켓 시위>





<사진 5, 6: 해든센터 방 풍경>



<사진 7: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박종만 위원장>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박종만 | 양동주민회 위원장

저는 양동쪽방촌에 거주하며 양동쪽방주민회를 처음부터 함께한 증인입니다. 공공임대인 해든집에 입주하고도 동자동공공개발실천 등 사회활동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양동주민회는 2021년도에 만들어진 주민단체입니다. 양동 쪽방촌 주민들이 입주한 공공임대인 해든집을 만들어낸 소중한 모임입니다. 양동쪽방주민회에서 양동주민회로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약자동행
한다면서
장애인
탈시설조례
폐지하는
서울시는
거짓말쟁이

패널5

조상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활동가

반갑습니다. 동지들.

1.

저는 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걷지도,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도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열다섯 살에 장애인거주시설에 들어가 15년을 살았던 시설수용 생존자 조상지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작은 선택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지, 몇 시에 일어날 것인지조차 결정하기 불가능합니다.

자기결정권이 통제된 시설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조차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가 있는 저는 인권유린을 당하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시설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2.

어머니의 도움으로 15년 만에 시설을 나왔지만,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

습니다. 어머니가 임대해 운영하고 저와 함께 살던 성일장여관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면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감옥 같은 시설로 돌아가는 것보다 성일장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옥상 망루에 올라가 철거민 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타인의 결정으로 살아온 내 삶을, 중증장애를 가진 내가 결정하겠다는 첫 번째 직접행동이었습니다.

3.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갈 수 없었던 저는 노들장애인야학을 만났습니다.

노들야학에서 장애인도 권리가 있는 시민이고, 장애가 있다는 것이 개인의 불행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는 정치의 문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동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는 당연한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보장하라고 투쟁했습니다.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장애인의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4.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 2020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노동자라는 명함을 가졌습니다. 저에게 공공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 권리와 문화를 이야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이 가진 경험과 능력으로 사회를 바꾸는 일도 노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액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없앴고, 저와 동료들은 하루아침에 해고노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너무도 중요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 것도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만들어낸 권리와 정책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5.

올해 저는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대표로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장애인이 시민이라고 인정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또 한 번의 직접 행동이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BTS가 광화문광장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을 세계적인 문화공간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평소 종이상자로 바람을 막으며 잠을 청하던 노숙인들이 사라졌습니다. 일부는 시설로 옮겨졌고, 일부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공연과 문화를 이야기하는 도시에서, 가난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치워져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 대신,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시설이라는 곳에 장애인들을 가둬두는 것입니다. 노숙인 문제와 장애인의 탈시설의 문제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탈시설은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 살 권리, 활동지원을 받을 권리, 이동할 권리,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를 누릴 권리,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권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집이 없어도 누구나 자신이 살아갈 곳과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신 결정할 수 없습니다.

6.

2022년 4월 20일에 출범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수용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장애인으로 구성된 전국 조직입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전북, 대구 지부가 있는데 저는 서울지부 회원입니다.

저 역시 지옥같은 장애인거주시설을 직접 경험한 생존자로, 전국의 탈시설동지들과 함께 시설수용을 끝내고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인천 색동원, 울산 태연재활원, 서울 송천 한마음의집, 경기 한길마을, 대구 청암재단 등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에서 폭력과 학대, 방임, 금전적 착취 등 구체적인 피해가 드러나고 있지만, 사건은 개별 시설이나 일부 종사자의 '일탈'로 축소되고 가해자 처벌이나 해당시설에 대한 일회성 조치로 마무리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설의 구조적 문제임을 알려내고 국가가 책임질수 있도록 동료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7.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탈시설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저와 같이 시설이라는 지옥을 경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시민으

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아시아 동지들의 투쟁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온 우리의 경험을 연결해 더 힘있는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아시아 현장의 목소리 : 투쟁은 나의 힘」

시설수용생존자 조상지

탈시설장애인당 대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회원

열다섯 살에 들어간 시설

무엇을 먹을지, 언제 일어날지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보낸 15년...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내 삶을 내가 결정한 첫 번째 직접행동

시설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 어머니 등에 업혀 **옥상 망루에 올랐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권리를 배우고 거리로 나서다

노들야학에서 장애인도 권리를 가진 시민임을 배웠습니다.





사진_비마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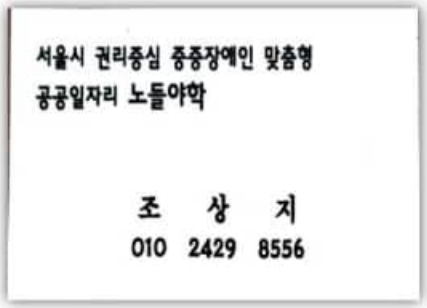
이동하고 공부하고 노동할 권리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생애 처음 얻은 '노동자 ' 라는 이름

장애인의 경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도 노동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없애고 우리를 해고**했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시의원 출마, 또 한번의 직접행동

우리 삶에 대한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출마했습니다.







장애가 있어도, 가난해도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의 탈시설 동지들과 함께

시설수용을 끝내고 지역에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1심, 징역 15년 선고

아주경제

與, 색동원 자금 횡령 추가 기소 시설장에 징역 2년 구형

장애인 29명을 수백 번 때리도 처분은 고작 '시정'과 '개선'

'상습학대에도 '솜방망이' 처분…대면재활원 업종 처벌'

"26년 간혀 살다 학대로 사망"…경자연, 성남 '예가원' 사태 규탄 및 시설 폐쇄 촉구

'해트논집 학대 의혹' 철저한 재수사 촉구…세종시 "시설폐쇄도 검토"





전국에서 반복되는 시설 인권참사
해답은 탈시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탈시설운동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제가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탈시설운동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만난 아시아 동지들의 투쟁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 온 우리의 경험을 연결해 더 힘있는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조상지 |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서울지부 활동가

서울탈시설장애인당 대표. 최중증장애인. 시설수용생존자. 다큐멘터리 감독. 해고노동자. 철거민 당사자. 탈시설운동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는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탈시설장애인들의 힘을 모아 만든 전국적인 연대체입니다. 시설수용을 끝내고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의 문화는
노점에 깃들어 있다

패널6

노점상의 역사와 노점상 운동

김나영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외협력실장

노점상의 역사와 노점상 운동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외협력실장 김나영

// 2026 아시아빈민대회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노점상의 시작과 단속의 현실

1960년~1970년대 산업화 시기

상경한 이농민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로 나서며 시작

상납과 갈취 구조

구청, 경찰 등 단속을 피하는 과정에서 상납 형태로 피해 빈번

군사 정권과 국제행사, 강제 단속

88올림픽 등 국제 행사 때 '환경미화' 미명 아래 무자비한 철거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건설

+ 노점상 조직의 수차례 이합집산과 연대 과정을 거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기치를 내걸고 2010년 1월 건설.

+ 강제철거에 맞선 현장 투쟁 및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갈취의 대상에서
당당한 사회적 주체이자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생존권 보장과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해체

✚ 혈세를 이용해
용역깡패를 고용한 철거

✚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
제도로 단속 강화

노점 행위를 '불법'을 넘어
'범죄화'하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







"노점상도 직업이다! 벌금말고 세금내며 장사하자!"

불법과 범죄의 낙인을 넘어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 운동



민중의 권리 쟁취와 민주화 투쟁 연대

- 전국의 노점상 단결을 통한 생존권 쟁취 및 연대사업
- 민중의 정치·경제 · 사회적 제 권리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민주화 운동



노점상의 생존권을 넘어 단결과 연대를 통한 당당한 사회경제주체로!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김나영 |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대외협력실장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의 대외협력실장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폭력적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패널7

주장욱 | 홈리스행동 활동가

당사자의 힘으로, '홈리스행동'



2001년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시작했습니다. 2010년 '홈리스행동'으로 출범하면서 홈리스 대중의 조직된 힘으로 홈리스 상태를 만들어 내는 세상을 철폐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홈리스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 내는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입장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사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2025 홈리스 추모제〉의 모습입니다. 홈리스행동은 여러 사회운동단체와 매해 동짓날을 즈음하여 홈리스 추모제를 엽니다. 한 해 동안 거리에서, 시설에서, 쪽방과 고시원과 같은 비적정 주거에서 사망한 홈리스를 추모하고, 이들을 홈리스 상태에서 살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우리 사회를 바꿔 나가기 위함입니다. (촬영: 최인기))

서울역 거리홈리스 사망 사건





2005년 1월, 서울역에 머물던 2명의 거리홈리스가 쓰러졌습니다. 당시 서울역 공익 요원들은 응급 처치 없이 죽어 가는 사람을 폐지 싣는 손수레에 실어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료 거리홈리스들이 분노하였고, 집단 항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공권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퇴거 위협, 폭언 및 폭행, 강압 행위를 받아 온 거리홈리스들의 분노가 집단적으로 표출되었던 사건입니다. (사진: 사망 사건이 발생한 당시 서울역 내부 대치 상황입니다. 당시 쓰러진 2명의 거리홈리스는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당시 대처와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대응이 있었으나 서울역 거리홈리스들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퇴거 압박과 차별에 시달렸습니다.)

조직된 분노가 운동의 기반으로



서울역 거리홈리스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홈리스 당사자들의 분노는 그간 공권력으로부터 탄압당한 역사 속에 서려 있던 것이었고, 이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활동가들은 홈리스 당사자들의 '조직된 분노'가 '변화의 힘'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하였고, 서울역 광장에서 월례 문화 행동을 열기에 이릅니다. 이는 이후 홈리스행동의 주력 조직 사업인 〈아랫마을 홈리스야학〉을 여는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사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월례 문화 행동'에 참여한 홈리스 당사자들의 모습입니다.)

서울역 강제 퇴거 (역사 내 노숙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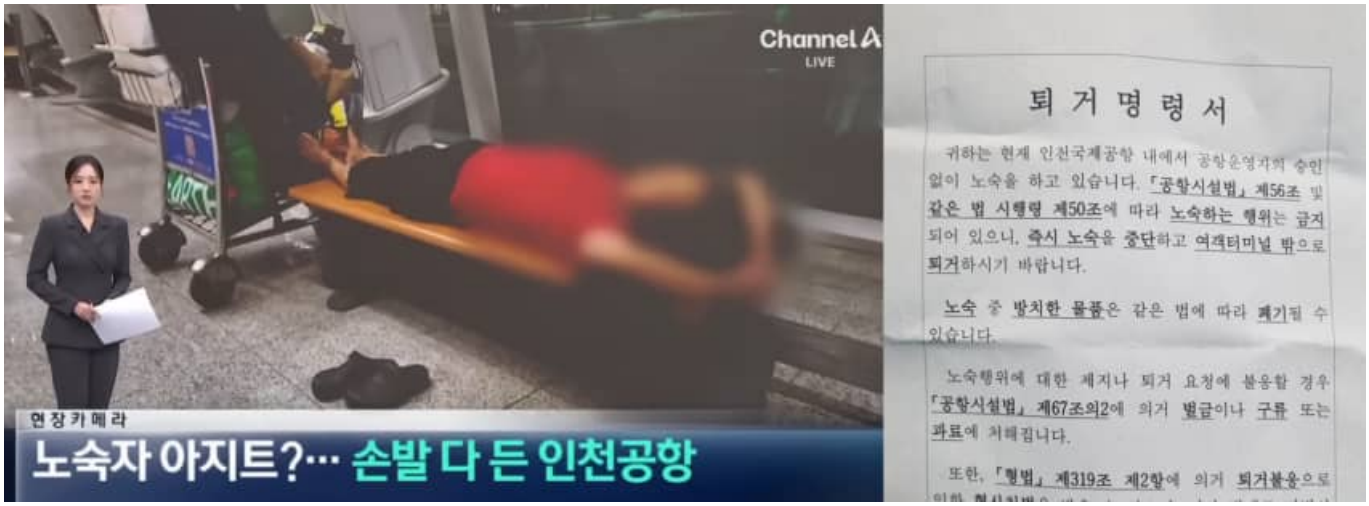
2011년 8월, 서울역은 노숙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조치 근거로 이용객 민원 등을 언급하였으나, 이 배경에는 보다 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서울역과 같은 공공 역사를 확장 및 증축할 때 민간 자본의 힘을 빌렸고, 그 결과 현재 대부분의 공공 역사는 역무 시설의 비중이 매우 작고 상업 시설의 비중이 매우 큰 '민자 역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사들은 '돈이 되지 않고 행색이 남루한' 사람들은 머물 수 없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사진: 강제 퇴거 조치를 저지하기 위해 홈리스행동을 비롯한 사회운동단체들은 천막 농성, 서울역 역사 점거, 집단 전입신고 등 대응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모두 홈리스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거권 보장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였고 싸움이었습니다.)

공공장소의 사유화, 밀려나는 홈리스



역 주변에 들어선 대규모 상업 시설들이 대중교통 이용객을 자신들의 고객으로 원활히 유치하기 위해 역 시설과 통하는 지하보도, 공중보행교 등을 건설하여 공공장소를 과도하게 상업화, 나아가 사유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한 '서울스퀘어'는 서울시 중구청이 소유 및 운영하는 공공장소인 '서울역 앞 지하보도'에 자사 보안 요원을 배치하여 지하도에 머무는 거리홈리스를 통제하고 퇴거하도록 위협하는 '업무'를 지시 및 집행한 바 있습니다. 홈리스행동은 거리홈리스 당사자들과 피켓 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집회 등을 통해 '서울스퀘어'를 압박하고, 이 사태를 방치해 온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 홈리스가 공공장소에 머물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진: 보안 요원이 현장 배치된 모습)

거리에서 거리로, ‘혐오의 먹잇감’으로



도심의 공공장소에서조차 밀려난 홈리스들은 도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공적 지원체계로부터도 멀어집니다. 그렇게 더욱 외지고,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떠밀려 가게 될 때, 더욱 쉽게 ‘공격’받습니다. 언론 채널A는 인천국제공항에 머무는 거리홈리스를 무단으로 촬영, 악의적으로 편집해, 이들이 공항에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유튜버’들은 이 영상을 가공해 혐오를 재생산하고 있고, 공항공사는 언론과 이용객 눈치를 보며 홈리스를 강제적으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지원체계 공백의 책임이 있는 인천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 거리홈리스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진: 채널A 보도(07.09.)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급한 퇴거명령서(0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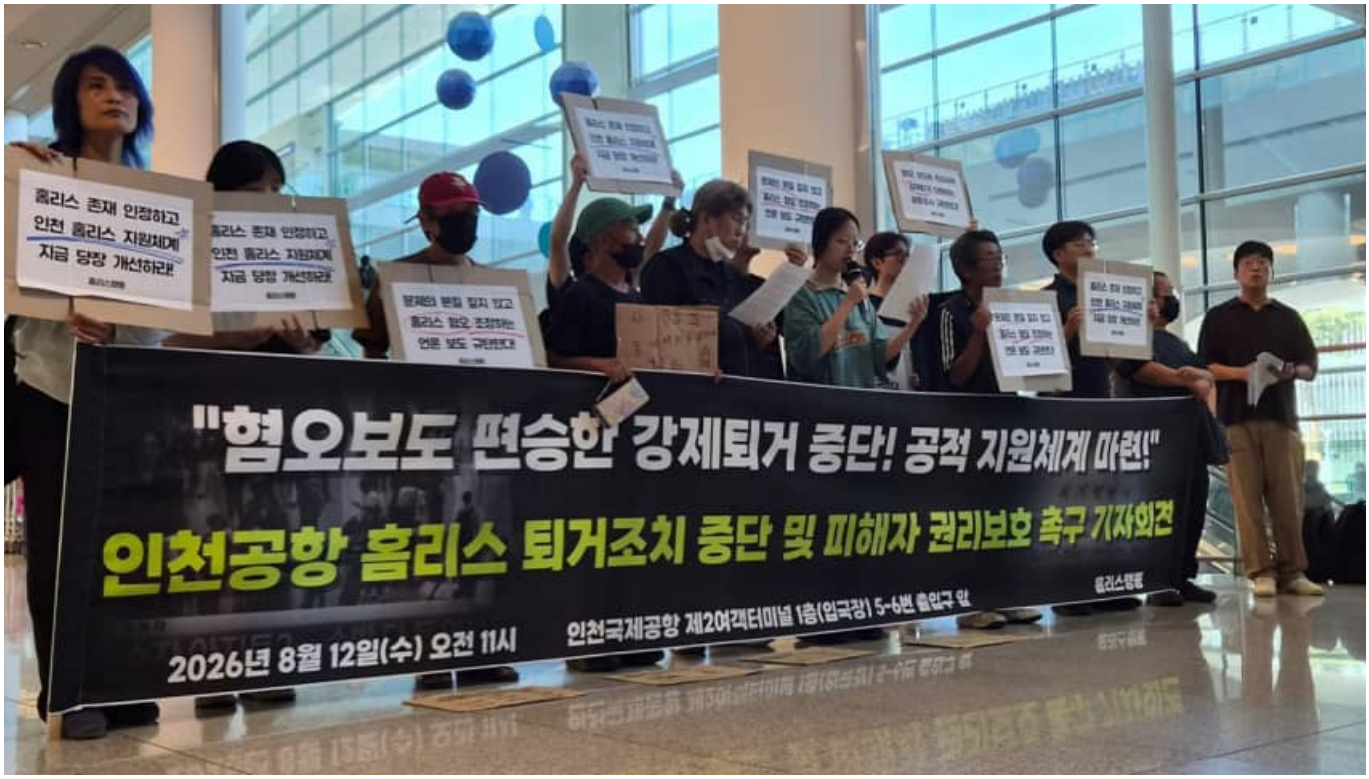


사진: 지난 8월 12일, 홈리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 채널A를 규탄하고, '혐오 보도'에 편승하여 강제적인 홈리스 퇴거 조치 단행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규탄하고, 이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인천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 및 퇴거 피해를 입은 거리홈리스 당사자들 중 일부는 홈리스행동의 지원을 통해 공항에서 피신하여 거처를 마련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거리홈리스는 퇴거당하여 흩어졌고, 일부는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죽은 듯이' 공항에서 삶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채널A 보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한 상황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는 면담을 통해 홈리스 퇴거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주장욱 | 홈리스행동 활동가

홈리스행동의 홈리스 당사자 조직 사업 중 하나인 홈리스야학에서 교사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공공장소에서 머물 권리'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HOUSING
FOR ALL
FIGHT
TO WIN

부록

2026
아시아빈민대회
초청단체 소개

대만

인생백미 (人生百味, DYAF, Do You a Flavor)

인생백미는 대만의 도시 빈곤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홈리스 당사자를 지원하는 NGO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서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란 따로 떼어 구분할 수 있는 특정 집단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변화할 수 있는 상태라고 믿습니다.

인생백미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는 '관계의 재구축'을 추진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사회교육 활동'을 전개합니다.

동행과 지원, 기록, 권리옹호 활동, 대중행동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 서비스에서 축적된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흥미롭고 새로운 형태의 활동과 실천 모델을 시도함으로써, 시민들이 각자 자신에게 편안한 방식으로 빈곤 문제를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

생명의 보루 소송 전국액션
(いのちのとりで裁判全国アクション)

일본 정부는 사회보장지출 삭감을 위해 생활보호 기준을 인하했습니다. 2013년 생활보호 기준을 평균 6.5%, 최대 10% 인하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세 차례에 나누어 시행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였던 이 생활보호 기준 인하에 맞서 전국 각지에서 1,000명이 넘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정투쟁을 이어왔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일본 대법원은 생활보호 기준 인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감액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필요한 보상을 절반 수준으로 깎으려는 폭거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지금도 각 지역에서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고재판소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국가에 항의하고 완전한 보상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일본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 (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

생활보호문제대책전국회의는 모든 사람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빈곤의 실태를 밝히고, 복지사무소 창구에서의 신청 제한을 비롯한 생활보호제도의 위법한 운용을 바로잡는 한편, 생활보호비 삭감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제도 개악을 막고,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 6월 설립된 단체입니다. 법률가, 실무자, 지원자, 당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유피에이
(UPA, Urban Poor Associates)

유피에이는 필리핀 도시빈민 공동체의 권리와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주요 의제는 토지권과 주거권, 점유 안정성, 부당한 퇴거와 강제이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퇴거 위협과 불안정한 점유 상태에 놓인 주민들이 스스로 조직되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주장하며,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유피에이 활동의 중요한 부분은 주민조직, 민간단체, 정부기관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피플스 플랜(People's Plan, 주민 주도 계획)을 추진하고, 빈곤층 친화적인 현지 재정착(on-site)과 도시 내 주거(in-city housing)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닐라와 타클로반 등에서 주민들과 함께 실제 주거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태풍 욜란다 생존자 566가구를 위한 포프 프란시스 빌리지(Pope Francis Village) 조성에도 참여했습니다.

주거 · 토지권뿐 아니라 재난관리,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 생계지원, 지역공동체 저축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퇴거와 강제이주를 겪는 주민들에게 법률지원과 위기관리 지원을 제공합니다. 리살과 케손에서는 칼리와 댐(Kaliwa Dam) 사업의 영향을 받는 두마갓-레몬타도족(Dumagat-Remontado) 원주민 공동체를 조직하고 법률지원과 법률 이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피에이는 도시빈민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rights-holders)이자 개발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봅니다. 주민조직화, 역량강화, 직접 지원, 구체적인 주거대안 마련,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안정적이고 포용적이며 재난에 회복력을 갖춘, 존엄한 도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필리핀

씨오엠 (COM, Community Organizers Multiversity)

씨오엠은 지역공동체의 역량강화를 촉진하는 주민조직화 및 교육기관입니다. 1994년 주민조직가와 사회개발 분야 전문가들이 설립한 씨오 트레인(CO TRAIN)에서 출발했으며, 1997년 씨오엠(COM, Community Organizers Multiversity)으로 발전했습니다.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 속에서 주민조직가와 개발활동가들이 지식과 기술, 관점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기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왔습니다.

씨오엠은 도시 · 농촌 ·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하며, 퇴거와 강제이주, 빈곤,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열악한 거버넌스, 기본서비스에 대한 낮은 접근성, 주거권과 토지권 등 소외된 지역공동체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시 · 농촌 · 원주민 공동체의 주민들을 조직하고 교육하는 한편, 주민조직가와 주민조직(PO), 다른 부문의 연대자들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주요 활동은 쟁점 중심의 주민조직화, 재난지역에서의 인도적 지원, 정책변화를 위한 옹호, 주민조직 구축과 연합체 건설, 지도력 개발과 역량강화, 네트워크와 연대체 구축 등입니다. 토지와 주거권, 생계, 재난과 기후변화, 젠더기반 폭력, 보건의료와 기본서비스 등 주민들이 직접 제기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씨오엠의 비전은 정의롭고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회이며, 활력 있는 주민조직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회변혁 참여를 변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차원에서는 유피에이와 함께 로코아(LOCOA)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화이러우 커미션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콩

소코
(SoCO, Society for Community Organization)

1971년, 홍콩의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제도를 지향하던 사람들과 교회 성직자들이 함께 소코(SoCO)를 설립했습니다. 소코는 문제를 직접 겪는 당사자들을 조직함으로써 평등하고 서로 돌보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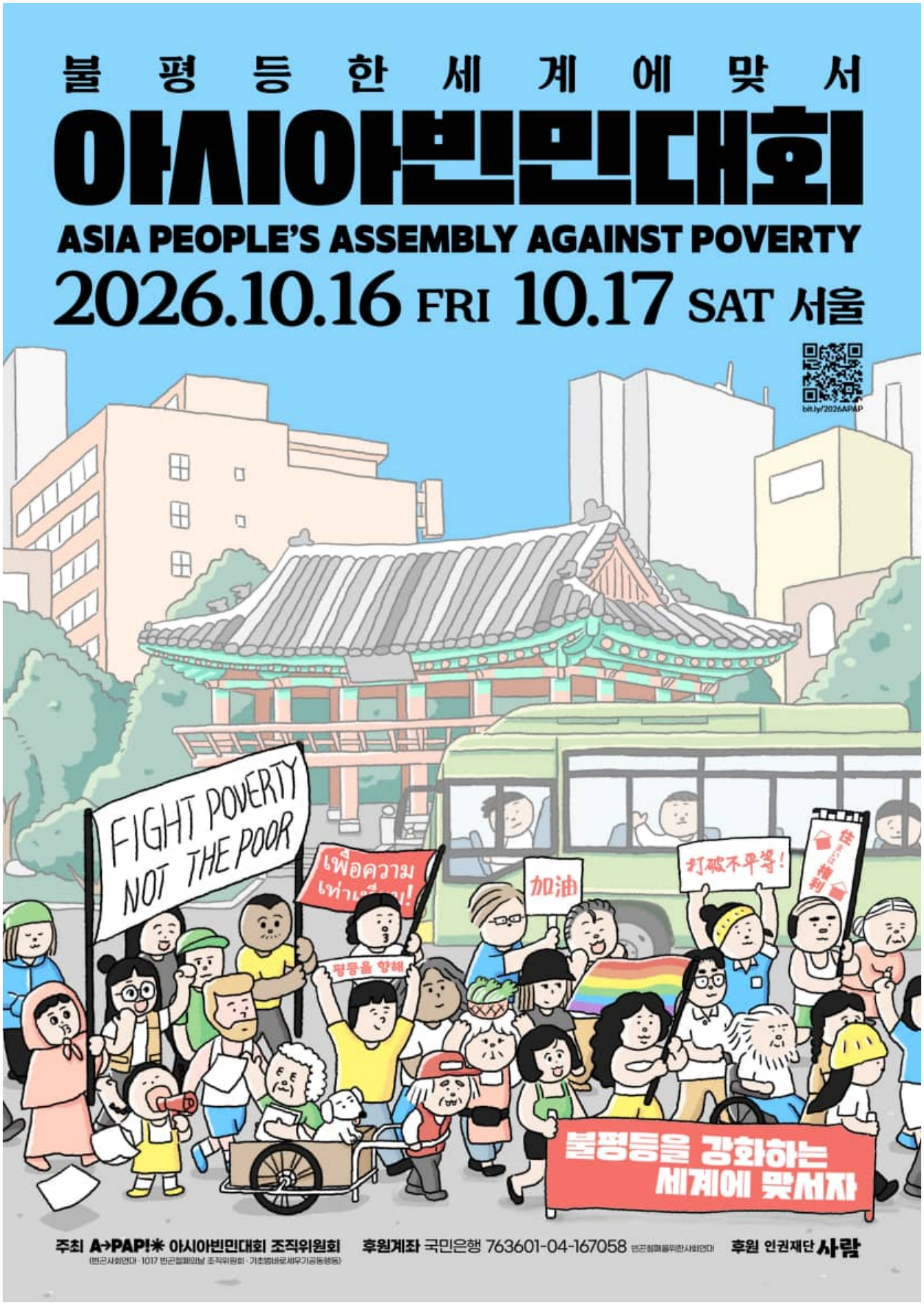
경제적 · 정치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빈곤층의 어려움은 자주 외면받습니다. 소코는 문제를 직접 겪는 집단을 조직하고, 주민들을 교육하며, 다양한 사회행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며, 정부에 정책적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원래 사회적으로 힘이 없던 사람들이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하나의 힘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코는 또한 지역사회에서 빈곤 완화 활동을 시작하여, 빈곤층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자원과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조직하여 빈곤 문제 해결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소코는 빈곤층과 함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활동해 왔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서로 돌보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빨리 귀국하라
못 간다.

메모


불평등한 세계에 맞서
아시아빈민대회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2026.10.16 FRI 10.17 SAT 서울
bit.ly/2026APAP
FIGHT POVERTY NOT THE POOR
เพื่อความ
平等を求め
加油
打破不平等!
住宅は権利
불평등을 강화하는 세계에 맞서자
주최 A→PAP!✳ 아시아빈민대회 조직위원회
(빈곤사회연대 · 1017 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763601-04-167058 빈곤철폐를위한사회연대
후원 인권재단 사람

bit.ly/2026APAP

아시아빈민대회
공식홈페이지

공동주최 아시아빈민대회米 ASIA PEOPLE'S ASSEMBLY AGAINST POVERTY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 21 FOUR 교육연구팀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후원 인권재단 사람